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22 / Oct. 2018

10



재정 인사이드

재정칼럼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예산 분석
혁신성장과 2019년 R&D예산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툄아보기

2019년 정부 예산안과 재원 배분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특별회계·기금 현황과 제도 변화
생체인증 기술의 활성화에 따른 위험성 재고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선택

Photo Essay
포토에세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킬 것인가,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고민합니다.
현명하게 방법을 선택해 그것을 추진력 있게
진행시킬 때 우리는 성공에 한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재정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합니다.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OCTOBER
2018 Vol. 22

재정 인사이트

- 06 재정칼럼: 2019년 정부 예산안**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예산 분석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혁신성장과 2019년 R&D예산
전승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15 톨아보기**
2019년 정부 예산안과 자원 배분

재정과 정보

- 20 이슈포커스**
특별회계 · 기금 현황과 제도 변화
생체인증 기술의 활성화에 따른 위험성 재고
- 38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월간 재정통계
테마통계: 통일 · 외교 분야
- 50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공공기관
- 54 해외재정동향**
미국의 「2018 장기재정전망」
- 62 풀어쓰는 경제 · 재정이야기 ⑩**
콜베르(Colbert) 등장과 프랑스 재정
- 66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6



12



32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재정칼럼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예산 분석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혁신성장과 2019년 R&D예산

전승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툼아보기

2019년 정부 예산안과 자원 배분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seeun@cnu.ac.kr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예산 분석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문제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외환 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가 시작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무역 부진, 경쟁국 추격의 여파로 주력 제조업의 위기라는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전은 사회 전반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한국경제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부양, 가계 부채 확대, 자영업 확대에 기대어 손쉽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채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서민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저임금 근로 빈곤 계층, 영세 자영업자, 실업자들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계층들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령계층의 증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증가는 향후 지속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빈곤화의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아래 2019년 예산이 수립되었



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62.2조 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2018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144.6조 원) 대비 17.6조 원, 12.1% 증가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 및 주거 지원을 실시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 완화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확대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우수인재 장학제도를 신설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체육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는데 생활 SOC건설과 결합하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3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을 확대(2조 원)하며 경영안정자금 0.3조





원, 신용보증 2조 원 확대 등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 교육, 판로 개척 지원,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수수료 지원 등 경영역량을 높이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교육 확대, 전직 장려수당 인상,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셋째,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65세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보장성이 강화되어 실업급여 예산액은 6.2조 원에서 7.4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직지원사업도 신설하기로 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10만 명)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3개월간 월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신규 지급(2.4만 명)하기로 했다.

2019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12.1% 증가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6.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과거보다 높은 증가율이 바람직한 것은 맞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복지지출 수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모든 부문에서 예산이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소폭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기에 완화되었지만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현금 급여인 생계급여의 예산 증액은 2018년 대비 1,000억 원에 불과하여 아쉽다. 복지지출 규모를 적어도 언제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관재**

전승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sh1105@daegu.ac.kr

혁신성장과 2019년 R&D예산



PUBLIC FINANCE COLUMN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성장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혁신성장은 변화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한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성장에 대한 강조는 2019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도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투자’, ‘소득재분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지원 대폭 확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 방향에 따른 투자의 중점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개선’,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예산안, 2018.8.) 그런데 투자의 중점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는 2019년 예산안에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2017년 예산안의 경제 관련 지출 분야는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그리고 SOC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혁신성장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는 R&D 분야 지출은 20.4조 원으로 2018년의 19.7조 원 대비 3.7%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2018년 R&D 분야 지출 증가율이 1.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높아졌고 지출규모가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2019년 R&D 분야 지출 증가율은 현 정부 성장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 12.1%는 물론이고, 총 지출 증가율 9.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R&D 분야 지출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2018~2022년 기간 중 연평균 5.2%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동 기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연평균증가율 10.3%,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7.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 시점이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환경의 변화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이후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딥 러닝(Deep Learning)이 가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공학, 3D프린터,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혁신적인 기술을 토대로 한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선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발표하는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디지털 경쟁력지수 등을 합산하여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9위로 평가되었다. 이는 아시아권인 대만(14위), 일본(15위)에 미치지 못하는 순위이다.



둘째,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R&D 지출 증가율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역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09년 10.8%, 2010년 11.4%로 10% 이상이었던 정부의 R&D 분야 지출 증가율은 2016년 1.1%, 2017년 2.1%, 2018년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016년 이후 정부의 R&D 지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하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의 2017년도 순위는 평가대상 34개국 중 7위로,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고려할 경우 작은 규모가 아니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한 국가 총 R&D 투자규모는 2016년 기준 세계 5위 수준이고, GDP 대비 총 R&D 투자비중은 2016년 기준 4.24%로 이스라엘(4.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부문 R&D 지출 증가율의 감소 추세는 R&D 투자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효율화 과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근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R&D 투자 증가율 감소 과정에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역시 일정 정도 약해질 수 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는 현 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혁신성장은 정부부문에서만 추구해서 될 일은 아니다. 공공과 민간 모든 분야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낮은 R&D 분야 지출 증가율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관재**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djkk1129@hanmail.net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해온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증가와 혁신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쉬운 일이라면 어느 나라든 잘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아닌 생활 혁신형, 지역 밀착형 SOC(생활 밀착형 SOC)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토목건설에 집중하는 사업과 달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SOC사업으로 지역에 도서관과 체육 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주택 등을 확충하여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최근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지역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유출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정부주도, 대기업 중심의 SOC사업에서 생활 밀착형 SOC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토목건축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이러한 SOC사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비스·건설 산업 등 생활 인프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지역 산업 기반을 확충·고도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간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여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생활 혁신형, 지역 밀착형 SOC사업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에 국민체육센터 60곳과 다목적 체육관 20곳, 국립박물관 등 19개 시설에 VR·AR(가상·증강현실) 체험관 설치 등 생활 밀착형 SOC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까지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8조 원 이상을 생활 혁신형 SOC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SOC사업이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투자로 국민들에게 간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였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로서 계획은 참 좋다. 그러나 실천이 중요하다. 항상 어느 정부든 거창하고 멋진 계획을 세워 보지만 그 결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번에 정부가 계획하고 투자하는 생활 밀착형 SOC사업과 혁신형 SOC 투자계획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고용절벽에 직면한 정부의 고민거리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주택 가격 특히,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의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낙후지역과 지방의 낙후지역까지 생활 밀착형 SOC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람중심, 지역중심 SOC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밀착형, 생활 밀착형 SOC 투자가 본래 목적에 맞게 추진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밀착형, 생활 혁신형 SOC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사업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중복투자는 물론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SOC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었다면 지역 밀착형, 생활 혁신형 SOC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중소규모 SOC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여 사람 중심 투자로 거듭날 것이다.





Together with Resident

둘째, 모든 사업이 그렇듯 관(官) 주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결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지역지원센터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향후 공급되는 시설물들의 관리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낭비적 중복투자를 피해야 한다. 지역 밀착형, 생활 혁신형 SOC사업이 선심성 투자로 변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교육시설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간접투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SOC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항상 생각해야 하며 사업이 끝나고도 지속적 활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통한 SOC사업이 부동산 투기로 변질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며 시작할 때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SOC사업, 사람중심의 SOC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광**





※ 툭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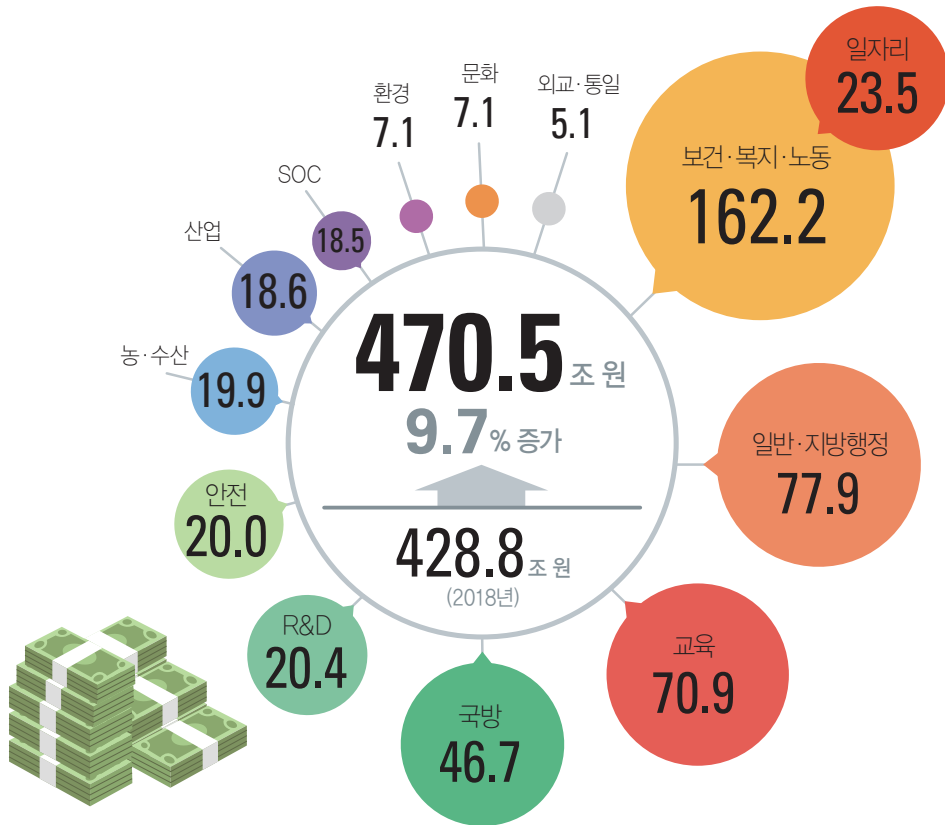
2019년 정부 예산안과 자원 배분

2019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70.5조 원으로 2018년 대비 9.7% 증가

•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470.5조 원(총지출 대비 34.5%)으로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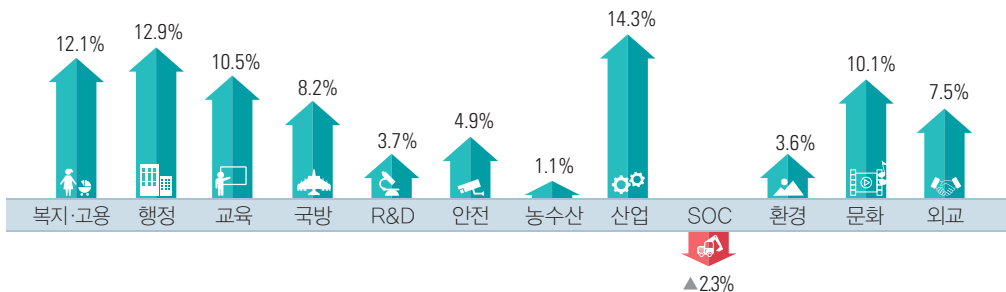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조 원)



분야별 예산 증감률

(단위: 전년대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 증가

2019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주요사업

(단위: 조 원, %)

핵심과제	주요사업	2018년	2019년	증가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연금	9.1	11.5	26.0
	의료급여	5.3	6.4	19.5
	생계급여	3.7	3.8	0.8
	주거급여	1.1	1.7	48.7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용자	1.6	2.0	21.7
고용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6.2	7.4	20.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0.9	1.4	51.8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0.2	신설

주: 2018년은 본예산, 2019년 예산안 기준이며, 괄호 안의 값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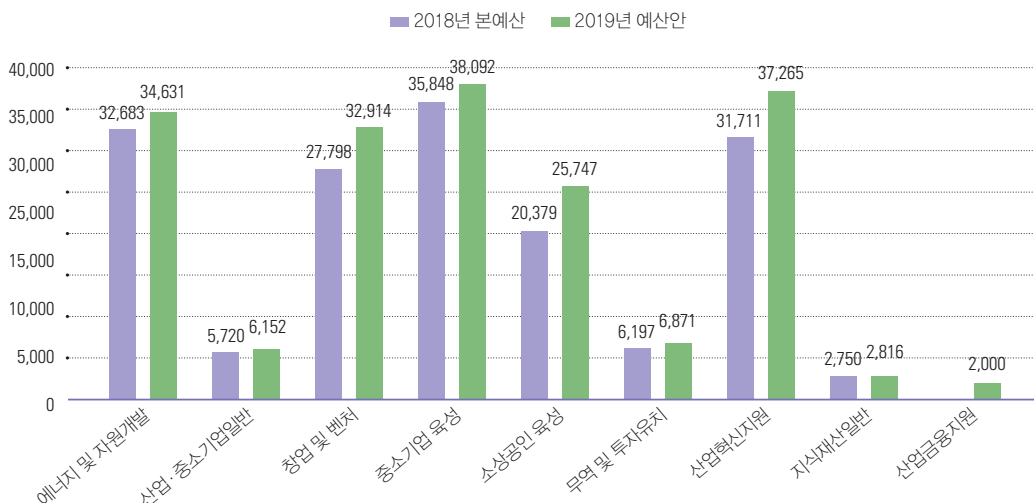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8.6조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가장 크게 증가(증가율 14.3%)

• 중소기업 육성(3.8조 원)과 산업혁신지원(3.7조 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시장경쟁력신지원(2,744억 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2,661억 원) 등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확대

2019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부문별 구성

(단위: 억 원)



주: 산업금융지원 부문은 2019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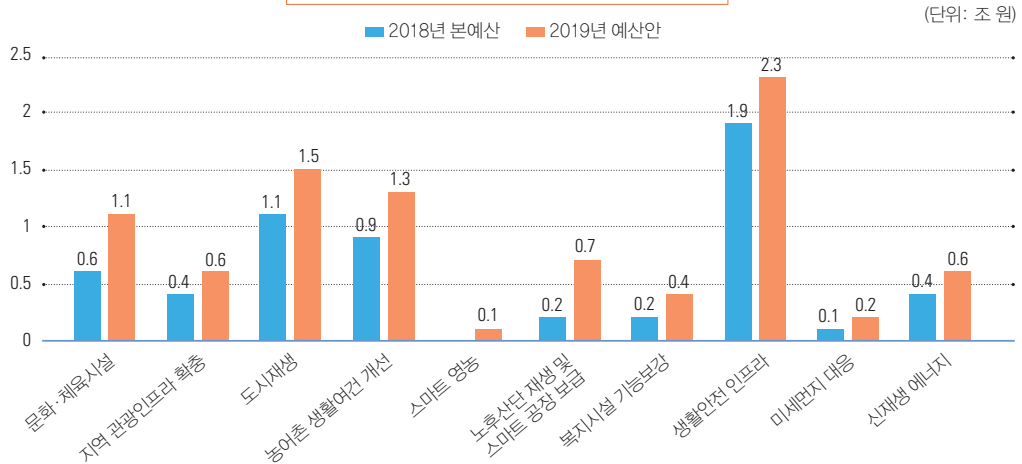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예산안 개요」, 2018



10대 생활 밀착형 생활 SOC에 총 8.7조 원 투자

• 생활안전 인프라(건축·시설 안전관리,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 등에 2.3조 원),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시티 기반 구축 등에 1.5조 원) 부문에 많은 투자

2019년 생활 밀착형 생활 SOC 예산 부문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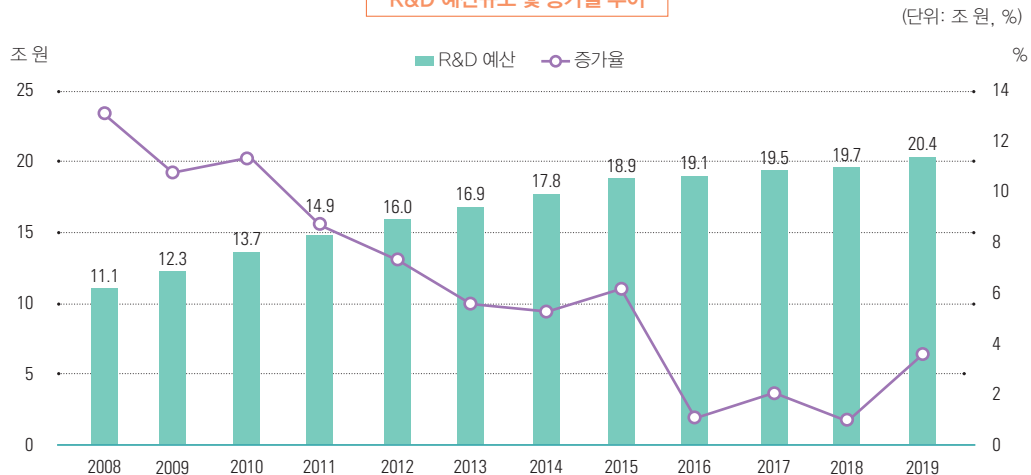


주: 2018년 스카트 영농 예산은 85억 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예산안 개요」, 2018

R&D 예산은 전년대비 0.7조 원 증가한 20.4조 원으로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 밀착형 R&D 투자 중심 확대

• 과학기술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52.9%를 차지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지원 등의 R&D 확대

R&D 예산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특별회계·기금 현황과 제도 변화

생체인증 기술의 활성화에 따른 위험성 재고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월간 재정통계

테마통계: 통일·외교 분야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공공기관

해외재정동향

미국의 「2018 장기재정전망」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콜베르(Colbert) 등장과 프랑스 재정

특별회계·기금 현황과 제도 변화

김선옥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sokim@kpfis.kr

우리나라 재정구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구조는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기금은 67개의 개별 기금으로 나뉘어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특정한 재원 또는 지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와 차이가 있다.

총계기준으로 2007년~2017년 사이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큰 변화 없이 특별회계가 7% 내외, 그리고 기금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보았을 때, 전체 중앙재정이 6.1%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특별회계, 기금은 각각 4.0%,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평균 증가율과 함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로 예산과 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2017년에 대한 예산과 기금의 전년대비 증가율로 변동폭이 기금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규모가 급감한 2011년의

우리나라 재정구조 추이(총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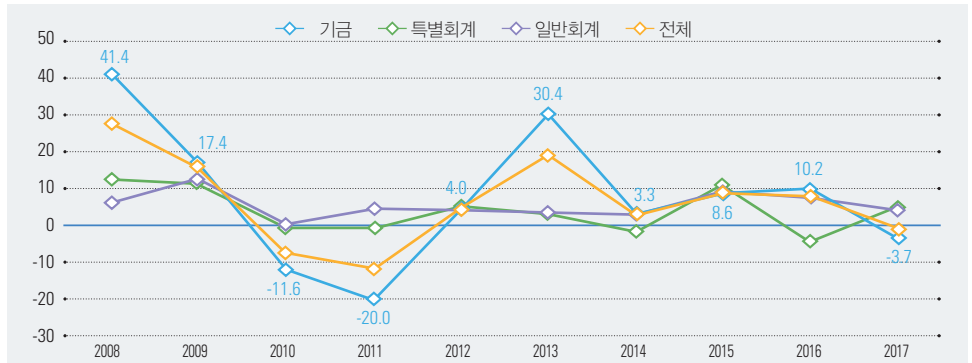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기금	326.8 (60.2)	542.6 (67.5)	383.7 (58.7)	520.3 (64)	583.2 (64)	643.0 (65.1)	619.5 (63.3)
특별회계	44.9 (8.3)	56.4 (7.0)	55.6 (8.5)	60.5 (7.4)	66.2 (7.3)	63.3 (6.4)	66.6 (6.8)
일반회계	171.2 (31.5)	204.9 (25.5)	214.9 (32.8)	232.4 (28.6)	261.9 (28.7)	281.7 (28.5)	292.9 (29.9)
총합계	542.9 (100)	804.0 (100)	654.2 (100)	813.1 (100)	911.4 (100)	988.0 (100)	979.0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세입(수입)결산기준

예산, 기금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세입(수입)결산기준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각각 4.7%, -0.6%인데 반하여 기금의 경우 -20.0%에 달했고, 2013년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이 3.9%와 3.1%일 때 기금의 경우 30.4%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기금이 예산에 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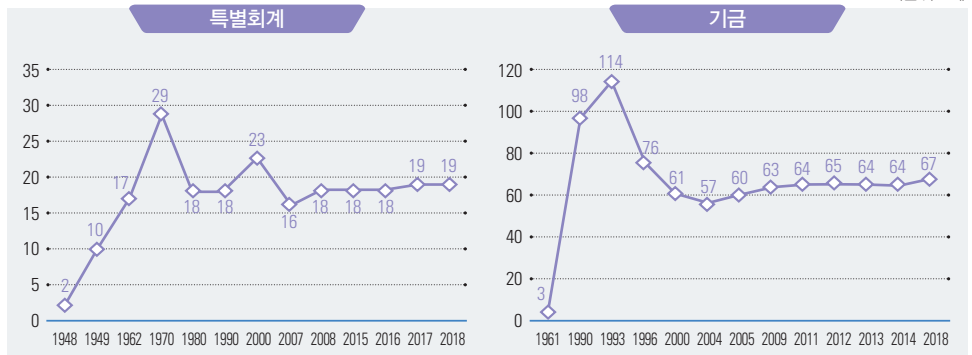
특별회계·기금 현황

1 특별회계·기금의 수

2018년도 기준으로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4개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업특별회계 5개로 총 19개가 설치되어 있고, 기금은 사업성기금 48개, 사회보험성기금 6개, 계정성기금 5개, 금융성기금 8개로 총 67개의 기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회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귀속재산과 외자를 관리하기 위해 1948년 임시외자충국특별회계와 임시관재충국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설치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 전후 수습을 위한 목적으로 추가로 설치하였다. 1960년대~1970년대 경제개발 계획 추진과정에서 특별회계가 활용되면서 1970년 29개로 가장 많은 특별회계가 있었고, 정부의 특별회계 정비로 2000년 이후부터 20개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특별회계, 기금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대한교통안전협회기금 등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고, 도입 후 1993년 114개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1994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기금 통폐합 노력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57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약 7%(총계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를 보면, 2007년 44.9조 원에서 2017년도 66.6조 원 규모로 연평균 4.0% 증가하였고, 세출규모는 2007년 42.6조 원에서 62.4조 원 규모로 연평균 3.9% 증가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이

(단위: 억 원)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입	448,633	563,950	556,409	604,798	595,132	661,901	633,216	666,288
세출	425,738	523,065	514,989	568,608	551,507	615,092	582,128	623,950
잉여금	22,895	40,885	41,420	36,190	43,625	46,809	51,088	42,338
차년도 이월금	11,484	12,146	27,980	44,610	52,208	43,948	31,692	29,906
세계 잉여금	11,410	28,739	13,439	-8,420	-8,583	2,861	19,396	12,432

주: 2017년도 차년도 이월금은 OLAP 결산(총계) 2018.1.31.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결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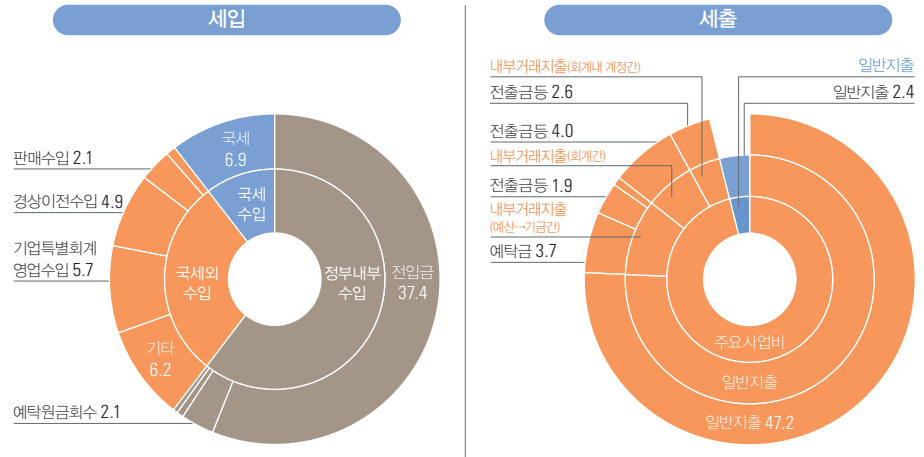
2017년 기준으로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국세수입이 6.9조 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고, 국세외수입이 19.4조 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국세수입 6.9조 원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농어촌특별세가 3조 8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내부수입 40.3조 원 중 전입금이 37.4조 원으로 전체 세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세출에서는 전체 62.3조 원 중 96.2%가 주요 사업비로 사용되는 가운데, 75.5%인 47.2조 원이 주요 사업비 중 일반지출로 대부분 지출되었고 내부거래지출이 20.5%, 보전지출이 0.1%를 차지하고 있다. 내부거래지출 중 특별회계에서 기금의 이동이 지출 전체 대비 9.9%를 차지했고, 회계 간 거래가 6.4%, 회계 내 계정 간 거래가 4.1%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2017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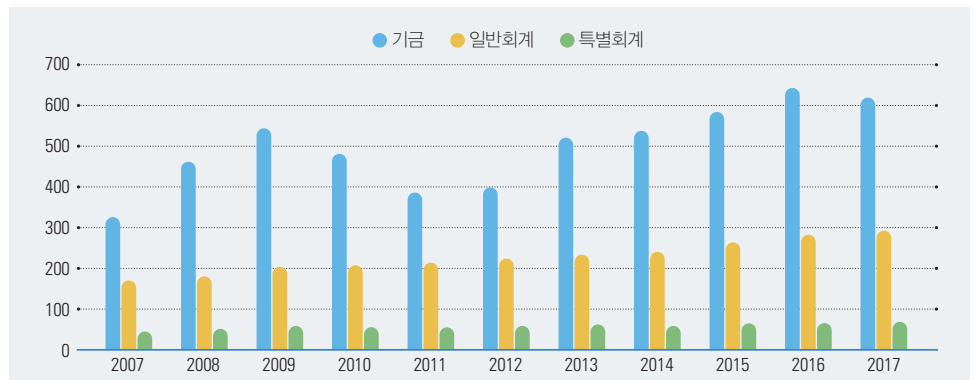
주: 세출에서 일반지출은 사업구분 상 기본경비, 인건비를 의미하고, 주요 사업비의 일반지출은 경상지출, 용자지출, 자본지출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결산기준

3 기금의 수입과 지출

2017년도 총계기준으로 기금의 운용규모는 619.5조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292.2조 원의 2.1배 규모이고, 특별회계 예산 66.6조 원의 9배 규모이다. 그리고 2017년 기금의 운용규모는 2007년 대비 1.9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연도별 기금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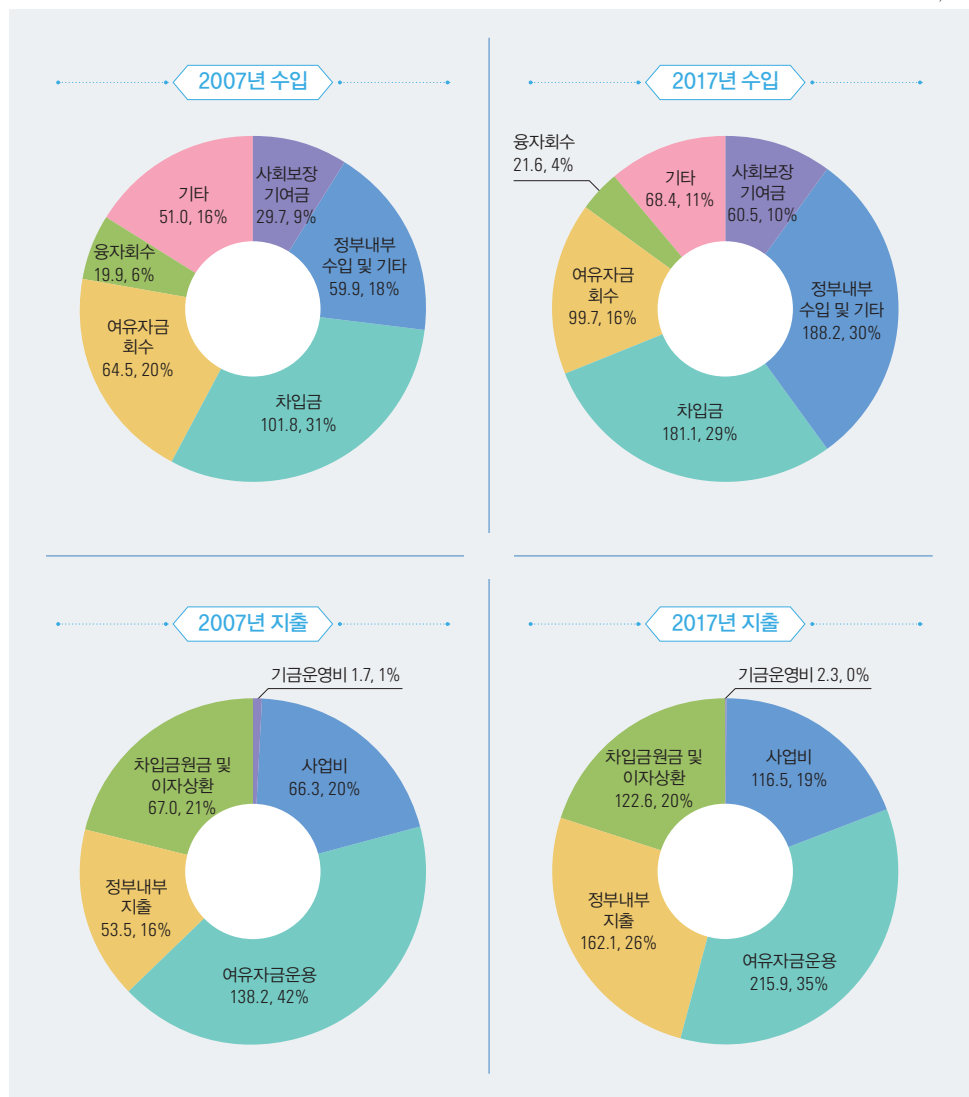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7년 기준으로 기금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정부내부수입이 188.2조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고, 차입금 181.1조 원, 여유자금회수 99.7조 원, 사회보장기여금 60.5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과 2017년 사이 수입구조 변화를 보면, 사회보장기여금,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기타 수입의 비중은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의 비중이 2007년 18.3%에서 2017년 30.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기금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여유자금운용 215.9조 원, 정부내부지출 162.1조 원, 차입금상환 122.6조 원과 기금운영비 2.3조 원이었고, 사업비는 116.5조 원 규모이다.

기금 수입·지출 구조

(단위: 조 원, %)



주 1) 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사회보장성기금에 해당하는 수입원임

2) 수입 중 기타에는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관유물매각대, 세계잉여금,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이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결산기준

4 전입금 비중이 높은 특별회계·기금

특별회계·기금의 세입 구조에서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충당한 뒤 운용할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되므로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내부수입 중 전입금의 비중이 큰 특별회계와 기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개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 특별회계는 13개로 이중 2017년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제외하면 교통시설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등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 기금은 23개였고, 이중 비중이 50% 이상인 기금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성), 군인연금기금(사회보험성),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성), 응급의료기금(사업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금융성) 등 6개다. 그리고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 기금은 5개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사업성)에서 비중이 높았다.

세입(수입)에서 전입금 비중이 높은 특별회계·기금(2017년 기준)

구분	특별회계·기금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전입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100%) - 교통시설특별회계(8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76.8%)
일반회계 → 기금으로 전입	- 지역신문발전기금(81.4%) - 범죄피해자보호기금(79.2%) - 군인연금기금(79.1%) - 대외경제협력기금(68.7%) - 응급의료기금(53.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50.0%)
특별회계 → 기금으로 전입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91.7%)
기금 → 기금으로 전입	- 양성평등기금(90.3%) - 청소년육성기금(72.5%)

특별회계·기금 제도 변화와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앙재정은 특별회계와 기금이 7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유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으나, 87개로 구성된 회계와 기금은 세입(수입)·세출(지출)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재정투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복잡한 재정구조는 유사사업의 중복문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특별회계·기금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회계·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련된 법·제도를 변화시켜 왔고 여러 차례 제도 개정을 통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회계 제도 변화

1948년	「국회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도입 임시외자총국 특별회계, 임시관재총국 특별회계 등 2개 설치
196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일반·특별회계 구분 및 설치근거 규정 -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경우 -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경우 -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를 존속시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대체 - 중앙정부의 예산은 이전과 동일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

자료: 국가기록원

기금 제도 변화

1960년	1960년 도입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대한교통신협회기금 등 3개 설치
1961년	「예산회계법」 제89조 개정으로 기금 설치근거 마련 회계로 구성된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기금 설치규정 마련
1973년	「예산회계법」 제89조 개정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 강화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 기금제도 전반의 기본적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을 재정운용과 연계·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없애고 기금으로 일원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예산과 기금의 통합운용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제정

자료: 박기영, 「한국재정」, 법우사, 2014

기금의 경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법률에 설치근거가 마련되면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 3개에서 시작한 기금이 1993년까지 114개까지 기금의

수와 운용금액이 점차로 증가하면서 기금운용의 불투명성, 방만·비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고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왔다¹. 이 과정에서 1993년과 1999년 두 차례 정부의 대규모 기금정비 노력으로 2000년 61개의 기금으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기금 수를 유지하고 있다.

기금 개선 노력

2001년

-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보고만 하고 행정부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것을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개선
- 기금관리주체가 국회 보고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기타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하던 것을 3/10 이상 변경할 경우 국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수정

2003년

- 금융성기금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
- 금융성기금 사업비 변경: 주요 지출항목의 50%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 기획예산처 장관의 심사 및 기금정책심의회 심의
-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3년마다 기금존치 여부에 평가 실시

2005년

-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적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관련 제도 개선

2006년

- 기금관리기본법을 폐지하고 기금도 국가재정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도록 개선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행정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변경 범위도 30%에서 20%로(금융성기금 사업비 50%에서 30%로) 축소

2019년 정부 예산안의 기본 방향 중 한 가지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정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의 질적 구조조정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출혁신 2.0」에는 특별회계·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특별회계·기금제도에 대하여 복잡다기화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특별회계·기금 제도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설치·운영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광}

¹ 연도별 제도개선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기금의 이해」, 이만우 외(2001), 홍수완 외(2015)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생체인증 기술의 활성화에 따른 위험성 재고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부교수

nerdrandy@dongduk.ac.kr



최근 국내·외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체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대중들의 편리하고 빠르게, 안전한 인증절차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일부 공항들은 이미 생체인증 체계를 도입해 실용화하였고, 국내에서도 생체인증을 이용한 출·입국 검사에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핀테크 관련 산업 및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인증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들이 이미 사용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생체인증 기술은 생체의 일부 정보를 인증수단으로 하여, 위·변조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인사 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의 생체정보(560만 건) 유출사례 및 지문위조 기술이 등장하면서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의 안전성 재고뿐만 아니라, 이미 유출된 생체정보의 악용에 따른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생체인증 방법들의 특징과 동향, 취약요인에 대해 알아본다.

생체인식 기술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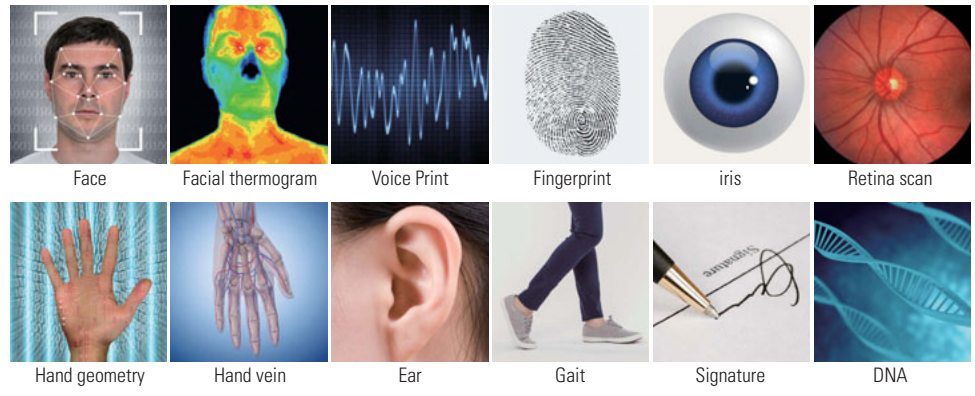
생체인식 방법

생체인식은 인간의 신체적인 정보를 이용한 인증방법으로서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범근(2016)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로 신체적 인식방법에는 <그림1>처럼 얼굴의 모양(face)과 열상(thermal image)을 이용한 얼굴인식과 안구의 망막(retina), 홍채(iris)를 인식하는 망막인식 및 홍채인식이 있다. 그리고 정맥(vein)과 지문(fingerprint)을 이용한 정맥인식 및 지문인식이 있으며, 인

간 손등의 혈관 모양을 이용한 장문인식이 있다. 두 번째로 행동적 인식방법에는 사람의 걸음 걸이와 서명, 음성 등을 인식하는 방법들이 있으며, 최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복합 적용하는 기술도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인식방법들이 있으나 편의성과 비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유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기술들도 있다.

〈그림1〉 생체인식의 신체적 방법



출처: 문기영(2005)

생체인식 방법들의 특징

생체인식 방법들은 인식률과 생성 데이터의 크기가 실용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 정연덕(2004)의 보고서와 PCWorld의 Dan Tynan(2012) 기사 글을 통해 다양한 생체인식 방법들의 특징을 알아본다.

- 지문인식은 생체인식 방법들 중, 가장 간편하고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성 데이터가 적으며, 비교적 신뢰도와 안정도가 높다. 그러나 지문이 손상되거나 지워졌을 경우, 인식이 불가하며, 땀이나 물기 등의 이물질로 인해 인식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문의 위조, 원격지에서 상대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 홍채와 망막인식은 짧은 시간에 정확한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위·변조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홍채인식의 경우, 1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해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지문인식보다 더 복잡하고, 높은 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민감한 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단점이 있다.
- 안면인식은 표정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고, 3차원 입체영상의 식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접촉식으로 자연스럽게 식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화나 변장, 조명, 표정, 사고로 인한 얼굴 모양의 변화에는 인식률이 떨어지며, 지문이나 홍채보다도 인식률이 비교적 낮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빠른 연산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 다른 인식방법들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다.

- 음성인식은 인식장치에 대한 접촉 없이도 식별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따라서 지문인식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과 결합한 서비스로 널리 알려진 인식방법이다. 그러나 인증에 있어서는 다른 인식방법보다도 인식률이 떨어지고, 소음 및 잡음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 정맥인식은 사람의 손등이나 손목의 정맥모양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인식률과 정확도가 높으며, 복제가 어려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하고, 구축비용이 높아, 활용범위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생체인증 방법들은 정보의 수집방법 및 기술, 특징들에 따라 여러 분야에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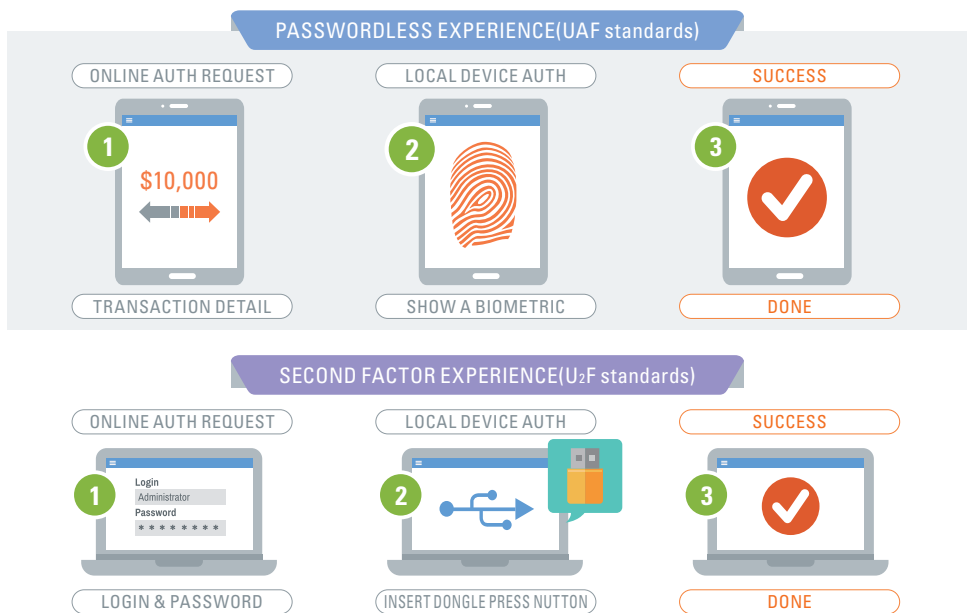
생체인식 기술의 동향

02

생체인식 기술의 표준화 동향

최근 FIDO(Fast Identity Online)는 생체인식 기술에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고, 인증체계의 안정성과 보안성,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인증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표준화는 2002년 ISO/IEC JTC 1 SC37(Biometrics) 국제 표준화 기구가 설립된 이후, 지문과 음성, 얼굴 등과 같은 사람의 고유 생체정보를 인식하는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방식과 ID, 비밀번호 방식으로 인증한 후, 보안키가 저장된 동글(dongle) 등을 사용하여 2차 인증하는 U2F(Universal 2nd Factor)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2〉 FIDO 표준 프로토콜



출처: FIDO ALLIANCE(<https://fidoalliance.org>)

윤일영(2018)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FIDO 2.0 출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FIDO와 연계한 생체인식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국내 기반기술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관련 분야 산업육성 등 다양한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체정보의 범용성과 호환성, 상호 운영성 등을 고려한 국내·외 생체정보의 교류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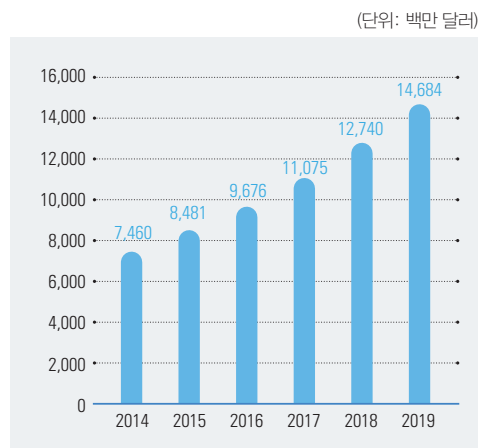
생체인증 기술의 활성화

생체인증 기술의 활성화에 대한 여러 보고서의 내용들을 전정훈(2016)의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생체인증 기술은 여러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낮은 인식율과 고가의 비용, 정확성 등의 문제들로 인해 사용을 꺼려왔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이동성과 휴대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 스마트폰은 생체인증 기술의 활성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서 매우 시기적절하게 등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이 결제와 교통카드, 신분카드 등의 기능을 함께 하면서 생체인증의 단점이었던 거부감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국내·외 생체인증 기술의 시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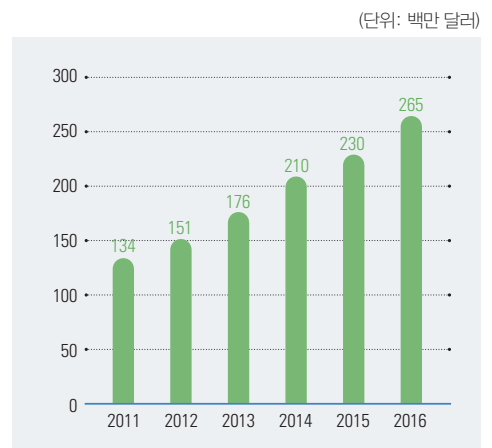
국내·외 생체인증 기술의 시장성에 대해 2015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모바일 간편 결제에 생체인증 도입에 대한 국내·외 생체인증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4년 74.6억 달러에서 2019년 146.8억 달러로 14.5%의 성장률을 <그림3>과 같이 전망하였다.

〈그림3〉 국외 생체인증 시장규모



자료: AMI(Acuity Market Intelligence)

〈그림4〉 국내 생체인증 시장규모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또한 국내 시장규모에 대해 김종현(2015)의 연구보고서는 <그림4>와 같이 2011년 1.3억 달러에서 2016년 2.7억 달러로 14.6%의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자료에서는 생체인증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이 단기적으로 대중화 및 보편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1〉 생체인식 기술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국내	2,970	3,300	3,740	4,290	4,916	5,634	14.6

출처: AMI(Acuity Market Intelligence) 및 KISTI(2015) 인용

〈표2〉 생체인식 기술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얼굴인식	55,029	53,299	58,488	61,522	3.79
지문인식	98,983	106,765	114,900	118,529	6.19
홍채인식	1,163	2,529	2,742	2,851	34.84
정맥인식	5,863	5,783	6,424	6,839	5.27
기타(음성인식 등)	10,336	6,151	7,427	8,596	-5.96

출처: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2014~2016)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정훈(2014)은 220만 개 이상이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에 따르는 비용과 신용카드사와 VAN사 등의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고객

의 생체 정보를 금융사에 등록해야하는 점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과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3〉 생체인식 기술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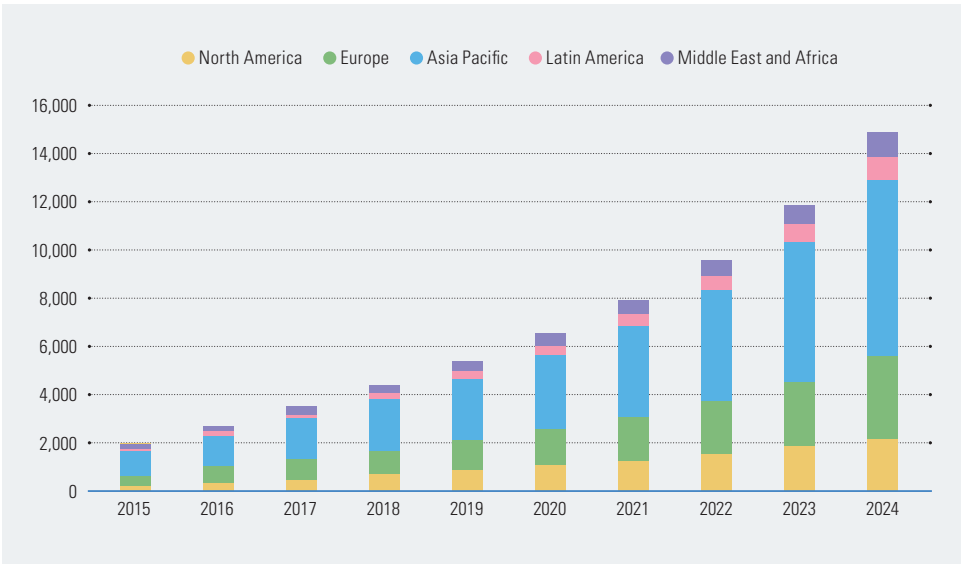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전세계	8,152	14,804	23,530	30,362	34,637	49,704	44

출처: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

〈그림5〉 전 세계 생체인식 시장 전망(2015-2024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트랙티카, KOTRA(2016)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윤일영(2018)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생체인식기술의 규모는 〈표1〉과 〈표2〉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21년까지 지속적인 성장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심지어 〈표3〉과 〈그림5〉를 통해 글로벌 국가들 중 아시아가 가장 큰 사용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 동향

개인정보의 침해는 기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격기술도 함께 진화한다. 김성일(2013)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생체인증 기술을 위협하는 공격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마트폰 해킹공격 유형들을 〈표4〉로 정리하였다.

〈표4〉 스마트폰 해킹공격 유형

 도난·분실	개인 정보 유출
 악성코드	- 과금 유발: 불특정 다수에 SMS 전송 - 정보 유출: 사용자 개인정보 외부 유출 - 장애 유발: 통화 - 배터리 소모
 무선 랜	가짜 무선 AP 및 무선 랜 자동접속
 스파이 앱	- 스텔스 모드, 원격전송 - 자녀, 직원, 배우자 감시 - 통화내역, SMS, 위치정보, 이메일, 접속URL, 사진 유출
 스미싱	- 앱 설치 권유 메시지 - URL이 포함된 메시지로 유포

공격들은 사용자 단말기 내에 있는 개인정보의 획득 및 악용, 유출, 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금융 관련 분야에 생체인증 기술의 적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예상된다.

생체인식 기술의 취약요인

03

생체정보의 고유성

생체정보는 기존의 인증 정보 형태와 달리 고유성이 매우 뛰어나며, 박범근(2016)과 박영철(2004)은 생체정보의 특성을 고유성과 측정 가능성, 생리적 특성 및 운동적 특성, 자동성, 식별 및 인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창범(2005)은 생체정보에 대해 영구불변성과 복제 가능성의 최소, 도용 위협의 양면성, 비기억, 비휴대성, 인격권의 직접적인 반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3명 모두 생체정보의 고유성과 영구불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FIDO는 생체정보의 고유성 유지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자 유추를 방지하고 서버로의 전송과 저장을 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Kroger 나 West Seattle, Thriftway, Piggly Wiggly 등과 같은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들이 생체정보를 자사 체인망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박영철(2004)의 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체정보의 고유성에 대해 자물쇠인 동시에 언제든지 침해당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잠재적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어 생체정보의 고유성이 오히려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생체정보의 보편성

최근 핀테크와 생체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간편 결제 등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ZDNet Korea(2016)의 6월 16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국내 여러 사업자들은 락인(lock-in)효과를 보기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인 'OO 페이'를 앞다투어 내놓았으며(쿠팡의 로켓페이와 11번가의 시럽페이,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 NHN의 पे이코), 몇몇 사업자들은 지문 및 홍채인식 기능을 이미 사용 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간편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생체인증의 보편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성일(2013)의 보고서는 <표4>와 같은 공격 시도 또한 높아질 것임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생체정보의 보편성과 위험성이 비례하고 있음을 보였다.

생체정보의 호환성

생체인증 기술의 글로벌 금융 분야의 적용은 <그림3>과 <그림4>처럼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지문결제 시장을 두고 인프라 구축에 나섰으며, 전자신문 etnews(2016) 5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올림픽을 겨냥한 지문결제 서비스의 전국 실용화 및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인터뷰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는 생체정보의 호환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체정보의 호환성은 차칫 잘못하면 글로벌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IDG News Service(Fred O'Connor(2015))는 기술하고 있다.



생체정보의 범죄 이용 가능성

생체정보는 사람의 신체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들로 고유성 및 편의성 등의 장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PCWorld, Dan Tynan(2012)에 따르면, 범죄에 악용될 경우, 상대가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IDG News Service(Fred O'Connor(2015))의 기사에서는 2015년 미국의 안전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에서 약 560만 명의 지문인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해커즈랩(2016)은 정밀 카메라로 손가락을 촬영해서 인쇄한 종이만으로도 잠금 장치가 풀리거나, 지문을 본떠 인증을 통과하는 사고사례들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생체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유출되었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생체정보의 경우 향후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을 마치며

04

얼마 전 국내에서는 생체인증 기관의 직원이 생체정보를 위조하여 각종 증명서를 출력하는 시연이 있었다. 대략의 시나리오는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그림6>과 같이 스캔된 형상을 아이들의 놀이 장난감인 클레이(점토)를 이용해 무인민원발급기로부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는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생체정보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림6> 위조한 점토 지문으로 공문서 출력



출처: 전자신문(2018.10.1.)

<그림7> 무인발급기로부터 등기부 등본 출력



만약 향후 생체인식 기술이 글로벌 표준화가 진행되어 국가 간에 생체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유출된 사용자는 글로벌 응용 서비스를 사망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생체인증 기술의 좋은 장점들만을 받아들여 응용부터 하기보다는 생체정보의 선택과 생성, 응용, 관리까지의 모든 위협과 위험성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나랑

참고 문헌

- 김성일, 차현나. (2013). '스마트폰 해킹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KT경제경영연구소 ISSUE & TREND」.
- 김종현. (2015). '국내외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 현황과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 금융경제동향 이슈브리프」 5권 19호. pp.11-14.
- 김수엽. (2017). '결제 서비스에서 생체인증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문기영. (2005). '생체인식 기술현황 및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TTA) Journal」 98호. pp.38-47.
- 박영철. (2004). '생체정보의 보호'. 「헌법학연구」 10권 4호. pp.308-311.
- 박범근. (2016). '생체인식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S&T Market Report」 39권.
- 박범근. (2016). '생체인식 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S&T Market Report」 39권. 2016. 2.
- 백영현. (2016).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바이오인식 기술 현황'. 「TTA Journal(바이오인식)」 165권. pp.47-52.
- 서승현, 전길수. (2010). '스마트폰 보안 위협 및 대응전략'.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Journal(special theme, 스마트폰 정보보호)」 132권. pp.44-48.
- 사큐이. '최신 금융회사 해킹 사례 및 보안 동향'. SECUI.
- 이창범. (2005). '생체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31권. pp.19-48.
- 이동기. (2015). 'FIDO(Fast Identity Online)생체 인증 기술 표준화 동향'. 「TTA Journal(표준 시험인증 기술동향)」 157권. pp.76-81.
- 윤일영. (2018). '바이오와 보안의 융합, 생체인식 기술'. '융합연구정책센터'. 110권.
- 정연덕. (2004). '생체인식기술(biometrics)의 효과적 활용과 문제점'. 「지식재산논단」.
- 정훈. (2014). '금융산업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 현황과 전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145권 42호. pp.1-5.
- 조상래, 최대선, 진승현, 이형호. (2014). '패스워드 없는 인증기술-FID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p.101-109.
- 전정훈. (2016). '바이오 인증 기술의 활성화에 따른 보안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논문지」 16권 5호. pp.57-63.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KISA 바이오인식 기술 연계한 공인인증 활용 기술 개발 추진'. 「창조경제」.
- 보안연구부 보안기술팀. (2015). '주요 간편 결제 서비스의 보안성 비교 분석', 「금융보안원」. pp.1-10.
- 전자신문 etnews. '지문결제 도입 한창 한일, 손가락 전쟁'. <http://www.etnews.com/20160429000272>. (검색일: 2016. 5. 1.)
- 전자신문 etnews. '주민등록증이 해킹됐다... 주민증 지문+스마트폰+점토 한덩이에 인감증명까지' <http://www.etnews.com/20181001000347>. 2018.(검색일: 2018. 10. 1.)
- 해커즈랩. '프린터 인쇄한 종이로 스마트폰 지문인식 성공'. <https://www.hackerslab.org/news/printer>. (검색일: 2016. 3. 11.)
- IDG News Service, Fred O'Connor. '해커들 1년 전부터 미국비밀정보사용허가 데이터에 접속'. <http://www.itworld.co.kr/news/94125>. (검색일: 2015. 6. 22.)
- PCWorld, Dan Tynan. '생체기술의 장점과 한계'. <http://www.itworld.co.kr/news/77055>. 2012. (검색일: 2012. 7. 30.)
- TECH M.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의 경쟁 그리고 2세대로의 진화'.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157. (검색일: 2016. 6. 18.)
- ZDNet Korea. '간편 결제에 지문인식 도입 바람 분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60624142015. (검색일: 2016. 6. 26.)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01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재정운용동향

총수입

327.1조 원

총지출

311.1조 원

통합재정수지

16.0조 원

관리재정수지

-12.0조 원

2018년 8월 중 총수입은 35.2조 원, 총지출은 28.4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27.1조 원으로 진도율은 73.1%이고 전년 동기 대비 27.7조 원 증가(진도율 2.3%p 상승)하였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311.1조 원으로 진도율은 71.9%이고 전년 동기 대비 29.1조 원 증가(진도율 3.1%p 상승)하였다.

(단위: 조 원, %)

	2017년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수입 (진도율)	299.4 (70.8)	329.6	372.4	399.2	430.6	50.8	77.4	121.2	169.9	214.0	243.8	291.9	327.1 (73.1)
총지출 (진도율)	282.0 (68.8)	317.0	345.2	370.0	406.6	35.8	76.5	122.9	169.6	205.3	247.3	282.7	311.1 (71.9)
통합재정수지	17.4	12.7	27.2	29.2	24.0	15.0	0.9	-1.8	0.2	8.7	-3.5	9.8	16.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6	31.2	34.6	37.9	42.5	2.5	4.8	8.8	13.8	17.9	22.0	24.7	28.0
관리재정수지	-10.2	-18.5	-7.4	-8.8	-18.5	12.6	-3.9	-10.5	-13.6	-9.2	-25.5	-15.5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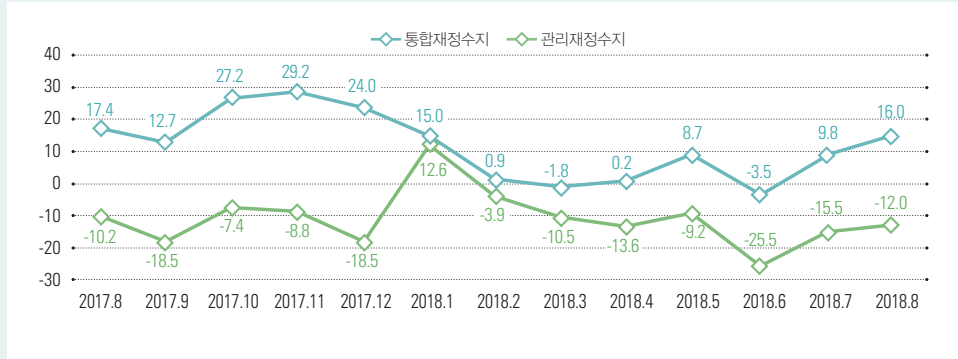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6.0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28.0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0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4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8조 원 악화되었다.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국세수입 추이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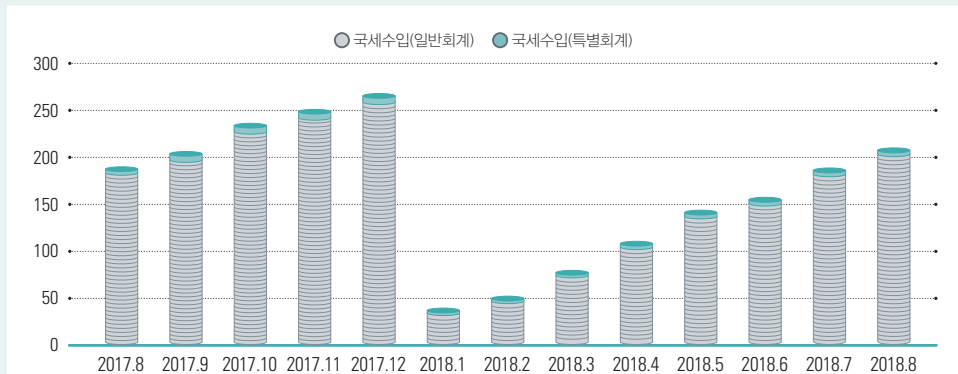
207.6조 원

특별회계

5.6조 원

2018년 8월 중 국세수입은 23.0조 원(소득세 7.9조 원, 법인세 12.5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13.2조 원이며, 일반회계 207.6조 원과 특별회계 5.6조 원으로 구성된다.

(단위: 조 원)



	2017년					2018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국세수입	189.5	207.1	236.9	251.9	265.4	36.6	49.9	78.8	109.8	140.7	157.2	190.2	213.2
일반회계	184.8	202.0	231.0	245.7	258.5	35.4	48.4	76.8	106.6	137.0	152.9	184.9	207.6
특별회계	4.8	5.1	6.0	6.3	6.9	1.2	1.5	2.0	3.2	3.8	4.3	5.3	5.6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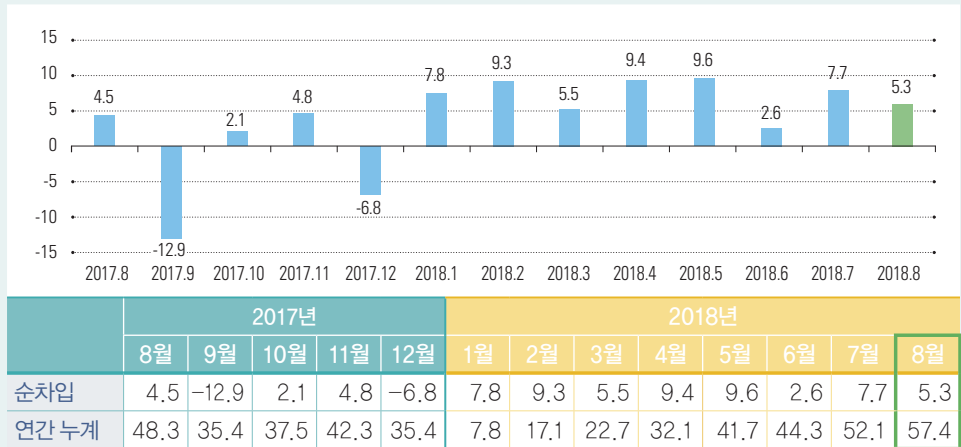
순차입 추이

순차입 전월 대비

5.3조 원

2018년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7조 원이다. 순차입 규모는 국고채권(5.0조 원), 국민주택채권(0.3조 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5.3조 원 증가하였다. 2017년 8월과 비교할 때 월별 순차입액은 0.8조 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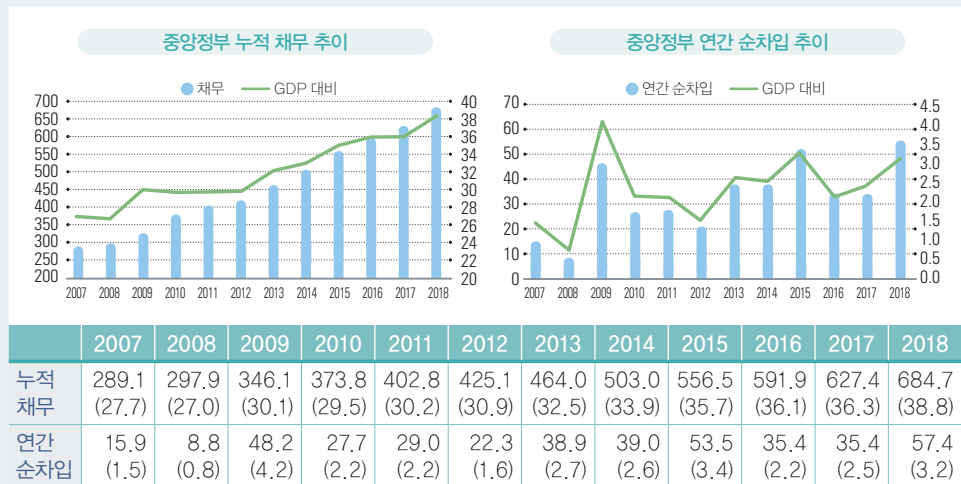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단위: 조 원, %)

중앙정부
채무 추이

누적 채무

684.7조 원



주 1)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

2) 2018년 GDP는 한국은행 전망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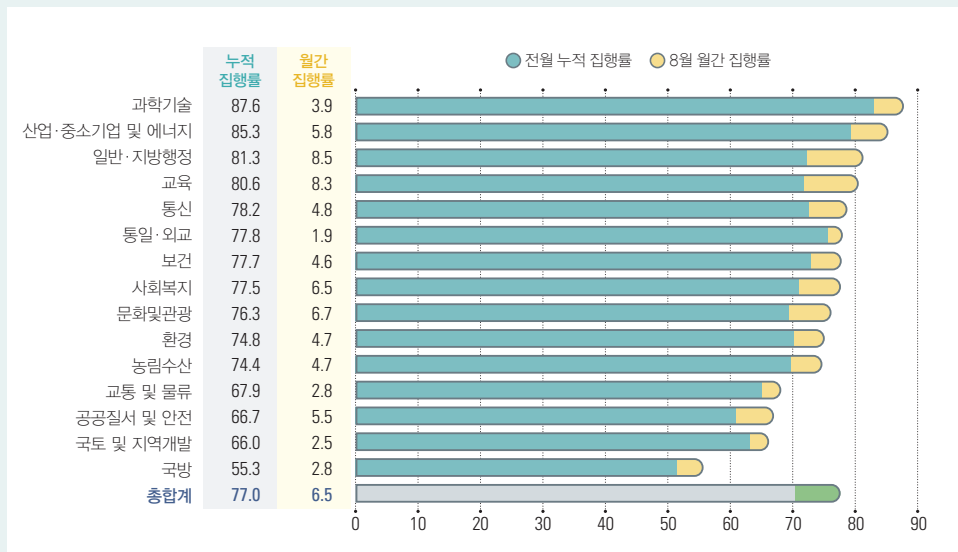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실적

8월 누적 집행률
77.0%

2018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8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238.6조 원 중 183.8조 원으로, 계획 대비 77.0%를 집행하였다. 분야별 누적 집행률은 과학기술(87.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5.3%), 일반·지방행정(81.3%), 교육(80.6%) 분야의 순으로 높으며, 국방(55.3%), 국토 및 지역개발(66.0%), 공공질서 및 안전(66.7%)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8월 월간 집행액은 15.5조 원(6.5%)이며,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8.5%), 교육(8.3%), 문화 및 관광(6.7%)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8.9조 원이며, 8월 누적 실집행액은 34.8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6%이다(8월 누적 교부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70.9%).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8월 누적 집행률

50.6%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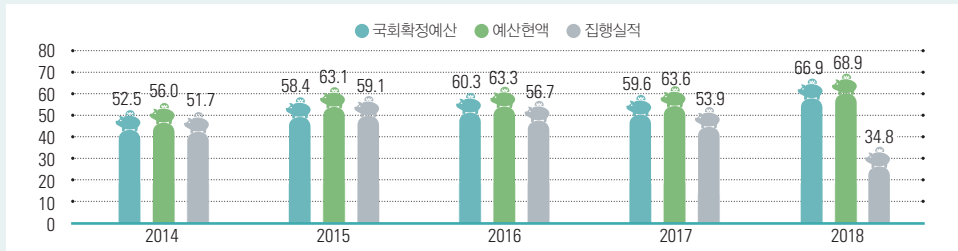
(교육)

가장 높은 집행률

74.3%

(과학기술)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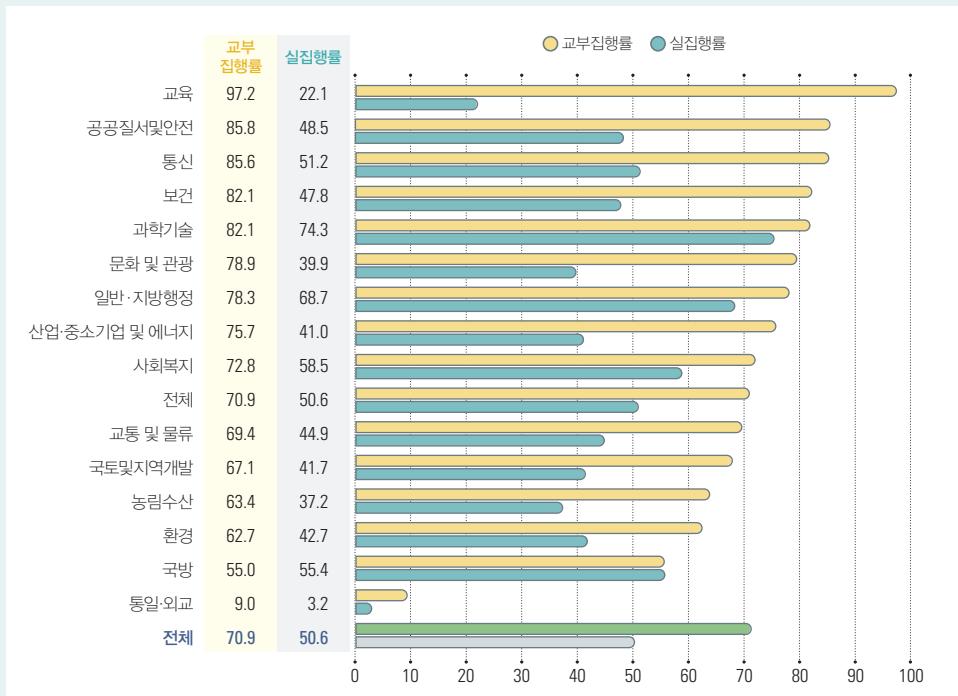


주: 2018년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집행행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2조 4,363억 원, 농림수산 3조 4,631억 원, 환경 1조 9,766억 원, 문화 및 관광 1조 6,614억 원 집행행액 대비 교부집행률은 교육 분야가 97.2%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행률은 과학기술 분야가 74.3%로 가장 높다.

(단위: %)



주: 2018년 8월 누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02 테마통계: 통일·외교 분야

이번 호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통일·외교 분야**의 지출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복지
- 교통·물류
- 통신
- 통일·외교**
- 환경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일반·지방행정
- 과학기술
- 농림·수산
- 보건
- 교육
- 국방
- 문화·관광
- 공공질서·안전
- 국토 및 지역개발

통일·외교 분야 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예산안

5.1 조 원

2018년 본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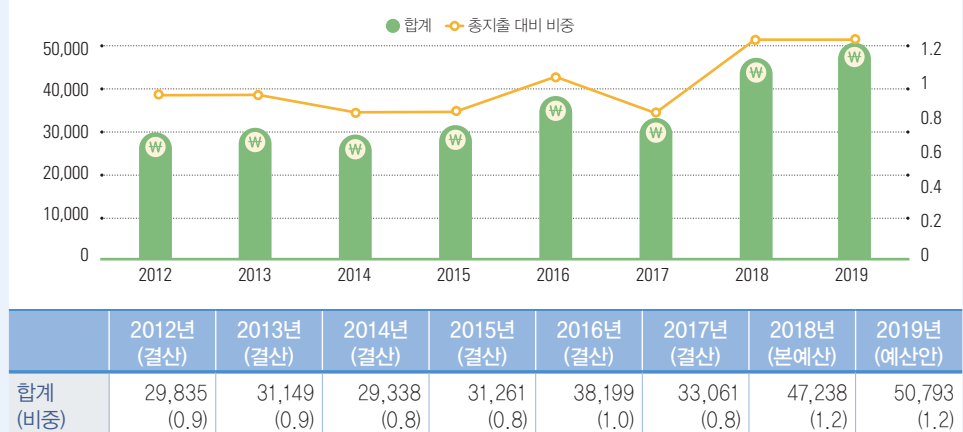
4.7 조 원

통일·외교 분야는 2012년 이후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1% 내외를 차지하며, 2018년부터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최근 1%를 상회하고 있다. 통일·외교 분야 규모(예산안)는 2019년 5.1조 원(총지출 대비 1.2%)이며, 2018년 예산 대비 0.4조 원 증가하였다.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은 2019년에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과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과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한 외교 인프라 구축과 ODA 등 국제사회 내 역할 강화에 필요한 재정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통일·외교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 원, %)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예산안)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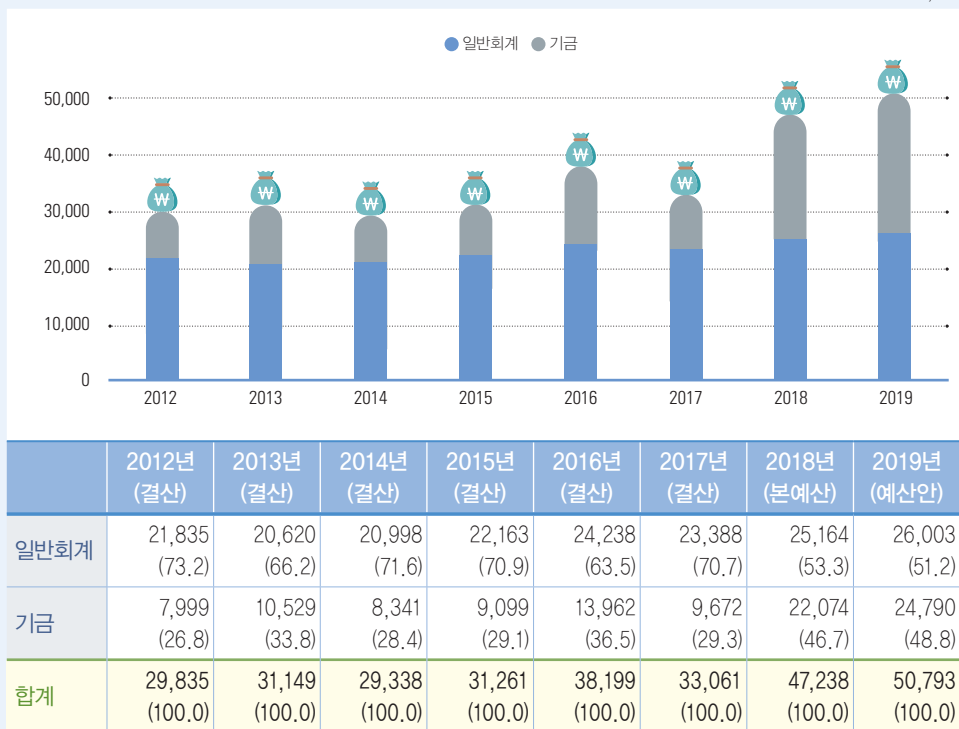
2.6조 원

기금

2.5조 원

2019년 예산안 기준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은 일반회계 2.6조 원(통일·외교 분야 총지출 대비 51.2%), 기금 2.5조 원(통일·외교 분야 총지출 대비 48.8%)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은 최빈국 등에 대한 무상원조와 국제기구 분담금, 재외공관 운영 등이 있으며,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과 대북 지원, 대외경제협력 지원 등이 있다.

(단위: 억 원, %)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요 기금의 사업비 추이 (2019년 예산안)

2019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통일·외교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총 5개이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2017년에 신설되었다. 기금별 운용 규모는 대외경제협력기금 1.2조 원(통일·외교 분야 기금 대비 48.2%), 남북협력기금 1.1조 원(통일·외교 분야 기금 대비 44.4%) 순으로 규모가 크다. 남북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7.6%와 10.3%로 주요 기금 중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1.2조 원

남북협력기금

1.1조 원

(단위: 억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대외경제협력기금	6,006 (75.1)	6,366 (60.5)	6,482 (77.7)	7,560 (83.1)	7,688 (55.1)	7,744 (80.1)	10,898 (49.4)	11,956 (48.2)
남북협력기금	722 (9.0)	2,988 (28.4)	906 (10.9)	584 (6.4)	5,320 (38.1)	709 (7.3)	9,624 (43.6)	11,005 (44.4)
국제교류기금	627 (7.8)	628 (6.0)	583 (7.0)	489 (5.4)	491 (3.5)	531 (5.5)	577 (2.6)	617 (2.5)
국유재산관리기금	644 (8.1)	547 (5.2)	369 (4.4)	466 (5.1)	462 (3.3)	328 (3.4)	565 (2.6)	813 (3.3)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	361 (3.7)	410 (1.9)	399 (1.6)
합계	7,999 (100.0)	10,529 (100.0)	8,341 (100.0)	9,099 (100.0)	13,962 (100.0)	9,672 (100.0)	22,074 (100.0)	24,790 (100.0)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통일·외교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대외경제협력기금 (2018년 본예산)

운용 규모(총계)

1.1조 원

통일·외교 분야의 대표적인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살펴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운용 규모는 2018년 본예산 기준 1.1조 원(총계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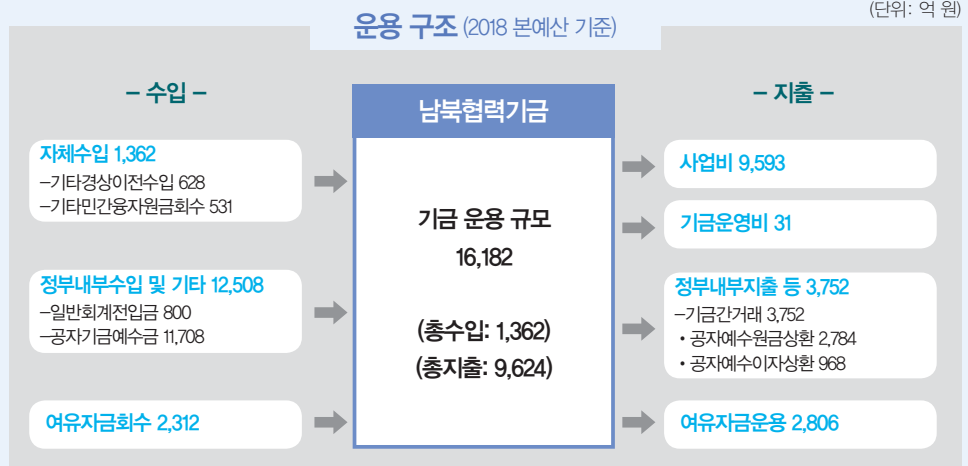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남북협력기금 (2018년 본예산)

운용 규모(총계)
1.6조 원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운용 규모는 2018년 본예산 기준 1.6조 원(총계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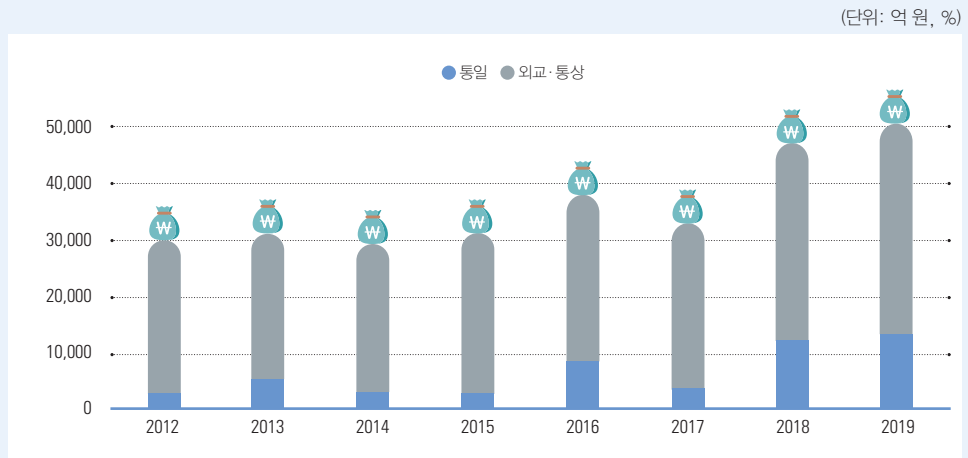


부문별 현황 (2019년 예산안)

외교·통상
3.7조 원

통일
1.4조 원

통일·외교 분야는 외교·통상 부문과 통일 부문으로 구성된다. 2019년 예산안 기준 외교·통상 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3.7조 원(통일·외교 분야 총지출 대비 73.3%)이며, 통일 부문은 1.4조 원(통일·외교 분야 총지출 대비 26.7%)이다. 통일 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2018년 예산 대비 0.1조 원 증가하였으며 외교·통상 부문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외교·통상	26,564 (89.0)	25,889 (83.1)	26,099 (89.0)	28,286 (90.5)	29,479 (77.2)	29,912 (90.5)	34,980 (74.1)	37,246 (73.3)
통일	3,271 (11.0)	5,260 (16.9)	3,239 (11.0)	2,976 (9.5)	8,720 (22.8)	3,149 (9.5)	12,258 (25.9)	13,547 (26.7)
합계	29,835 (100.0)	31,149 (100.0)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47,238 (100.0)	50,793 (100.0)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 대비 부문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요 사업 (2019년 예산안)

대개도국차관

1.2조 원

국제개발협력

0.8조 원

통일·외교 분야는 대개도국차관 1.2조 원, 국제개발협력 0.8조 원 등 개별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진 않으나, 최근 신남방정책 추진 및 남북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2019년 통일·외교 분야의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단위: 억 원)

부문	구분	사업명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외교·통상	일반회계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6	22
		공공외교 역량강화	144	158
		재외국민 보호	112	117
		국제개발협력(ODA, 출연)	7,705	8,070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융자)	10,581	11,612
통일	일반회계	남북회담 추진	8	16
	남북협력기금	경험기반(무상)	2,480	3,093
		경험기반(융자)	200	1,197
		이산가족 교류 지원	120	336
		사회문화 교류 지원(국고보조)	129	205

주 1) 총지출 기준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2019년 예산안)

22억 원

외교·통상 부문의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은 동남아 국가들과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고, 인도 및 아세안 등 신남방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규모 확충(700→1,400만 불)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예산안에 22억 원(2018년 예산 대비 6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2019년 예산안)

158억 원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지식·정책 등을 활용하여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태권도 대회, K-pop 페스티벌 등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등 국민참여형 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관련 예산안 편성액은 158억 원으로, 2018년 예산(144억 원) 대비 14억 원 증액하였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 (2019년 예산안)

117억 원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체계적인 해외안전정보 제공, 해외 사건·사고 대응, 영사콜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해외 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영사콜 상담사를 증원하고 상담시스템 DB 이중화 추진을 위하여 2019년 예산안 기준 117억 원(2018년 예산 대비 5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공적개발원조 (ODA) (2019년 예산안)

대개도국차관
1조 1,612억 원
국제개발협력
8,070억 원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말한다. 한국의 ODA는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¹(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를, 외교부가 무상원조²(한국국제협력단 출연)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예산안 기준 대개도국차관(유상원조) 사업에는 1조 1,612억 원(2018년 예산 대비 1,031억 원 증액), 국제개발협력(무상원조) 사업에는 8,070억 원(2018년 예산 대비 365억 원 증액)이 각각 편성되었다.

¹ 차관은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원조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라고도 하며,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용자와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이다.

² 증여(Grant)라고도 하며,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말한다. 채무변제, NGO 지원, 원조사업 시행 시 수반되는 특정 비용 등도 증여에 속한다.



남북회담
(2019년 예산안)

16억 원

통일 부문의 일반회계에 편성된 남북회담 관련 예산은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제고화를 목적으로 남북 간 회담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1971년 이후 남북정상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 분야별로 각종 회담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총 656회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2019년 29회(2018년 대비 7회 증가)의 회담 개최를 상정하고, 관련 예산으로 2019년 16억 원을 편성하였다.

경협기반
(2019년 예산안)

경협기반(무상)

3,093억 원

경협기반(유자)

1,197억 원

남북협력기금의 주요 증액 사업은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을 위한 경협기반(무상, 유자) 조성하고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다. 정부는 2019년 기준 4,2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 대비 1,610억 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
(2019년 예산안)

336억 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사업은 2000년 이후 상봉행사 및 화상상봉 개최를 통한 이산가족 교류 지원과 함께 2008년부터 금강산에 위치한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면 상봉과 고향 방문 확대를 가정하여 2019년 336억 원(2018년 대비 216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사회문화
교류 지원**
(2019년 예산안)

205억 원

사회문화 교류 지원 사업은 남북 간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남북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민간보조 형태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겨례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 유적지 공동발굴, 국제경기 대회 단일팀 구성 등 민족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에 205억 원(2018년 대비 76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남북**



이달의 이슈키워드: 공공기관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공공기관’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일자리’, ‘공공성’ 등이 주요 연관어로 도출되어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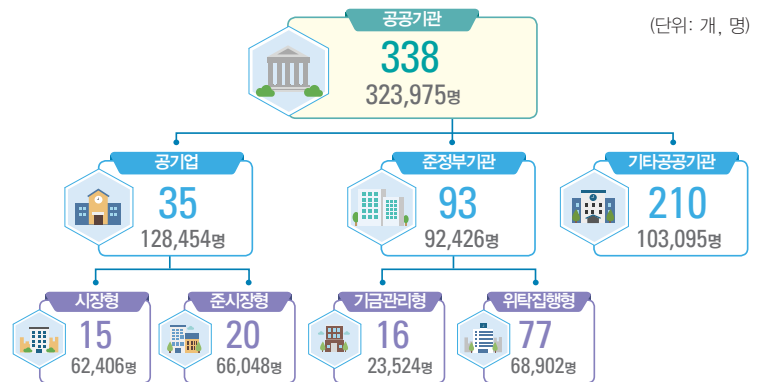
공공기관 연관어

- 혁신
- 채용
- 국민
- 일자리
- 기업
- 지원
- 공공성
- 특권
- 경기도
- 경영
- 혁신도시
- 해외출장
- 성장
- 예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어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8.9.12.), 수집기간: 2018.8.1.~8.31.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¹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을 말하며 역할과 규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2018년 현재 공기업 35개(128,454명), 준정부기관 93개(92,426명), 기타공공기관 210개(103,095명) 등 모두 338개(323,975명)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 부설기관 포함한 임원, 정규직에 대한 총 정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go.kr, 2018.9.19.)

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지원예산

공공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출연·출자 등으로 공공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공공기관 지원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공공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은 2013년 49.0조 원에서 2018년에 62.0조 원으로 연평균 4.8%, 인원은 27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3.5%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정부지원 추이

(단위: 조 원,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정부순지원수입 ¹⁾	49.0	53.1	59.6	61.4	62.5	62.0	4.8
임직원현황 ²⁾	272,462	280,081	288,308	300,467	312,320	323,975	3.5

주 1) 정부로부터 받은 순지원 규모(기금계정 제외)

2) 부설기관 포함한 인원, 정규직에 대한 총정원

3) 결산 기준(2018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go.kr, 2018.9.19.)

2018년 본예산 기준 62.0조 원의 정부지원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45.1%인 28.0조 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36.7%인 22.8조 원, 기타공공기관이 12.2%인 7.6조 원, 준시장형 공기업이 5.8%인 3.6조 원, 시장형 공기업이 0.2%인 0.1조 원을 받았다.

공기업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될 수 있으며, 공기업 중에서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2018년 본예산 기준 시장형 공기업은 대부분 출자²⁾형

2018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구조

(단위: 조 원, %)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계
공기업 (시장형)	—	0.1 (1.8)	0.04 (0.3)	—	—	0.001 (0.0)	—	0.1 (0.2)
공기업 (준시장형)	—	3.0 (91.8)	0.4 (4.1)	0.02 (1.2)	—	0.2 (5.5)	0.002 (0.7)	3.6 (5.8)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0.6 (3.3)	0.1 (2.8)	0.2 (1.7)	—	21.9 (89.5)	0.03 (1.0)	—	22.8 (36.7)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12.6 (69.5)	0.02 (0.6)	9.0 (81.7)	2.0 (98.8)	2.5 (10.3)	1.5 (55.2)	0.2 (71.1)	28.0 (45.1)
기타 공공기관	4.9 (27.2)	0.1 (3.1)	1.3 (12.2)	—	0.04 (0.2)	1.1 (38.3)	0.1 (28.2)	7.6 (12.2)
계	18.1 (100.0)	3.3 (100.0)	11.1 (100.0)	2.1 (100.0)	24.4 (100.0)	2.8 (100.0)	0.3 (100.0)	62.0 (100.0)

주 1) 본예산 기준(기금계정 제외)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go.kr, 2018.9.19.)

2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 취득에 대한 금전적 반대급부이다.

태로 정부지원금 62.0조 원의 0.2%인 0.1조 원을 받았다.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가장 많은 479억 원의 수입을 받아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석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 경제기반 및 국내 석유수급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다음은 한국광물자원공사로 272억 원을 지원받아 국가 기간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광산개발을 도모하고 전략광종³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중에서 지정될 수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은 정부 지원의 5.8%인 3.6조 원으로 시장형 공기업처럼 대부분 출자형식이었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 정부수입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4조 원의 수입을 받아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1.1조 원을 지원받아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등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될 수 있으며, 준정부기관 중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부 지원 62.0조 원의 36.7%인 22.8조 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 중에서 21.9조 원은 이전수입⁴이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많은 21.9조 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급여 및 노인 기초연금지급 관리 등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으로 0.5조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한 산재보험사업, 고용안정화를 위한 고용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중에서 지정될 수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2.6조 원의 출연⁵ 등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인 28.0조 원(45.1%)을 지원 받았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많은 8.5조 원을 지원받았고, 한국장학재단이 4.2조 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자의 의료보험 관리, 장기요양 급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장학금 등으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출연 4.9조 원을 포함하여 정부순수입 62.0조 원의 12.2%인 7.6조 원을 받았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이 0.4조 원, 창업진흥원이 0.4조 원 등을 지원받았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능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등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다. **나열**

³ 전략광물이란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광종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6대 전략광물로 선정하였다.

⁴ 이전수입이란 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전입금과 같이 기타 정부(타 기금 등)로부터 받는 수입을 말한다.

⁵ 출연이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 고유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수입을 말한다.

미국의 「2018 장기재정전망」

한승희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미국의 의회예산처(CBO)는 매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동안의 연방정부 수입, 지출, 재정수지, 채무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6월 발표된 「2018 장기재정전망」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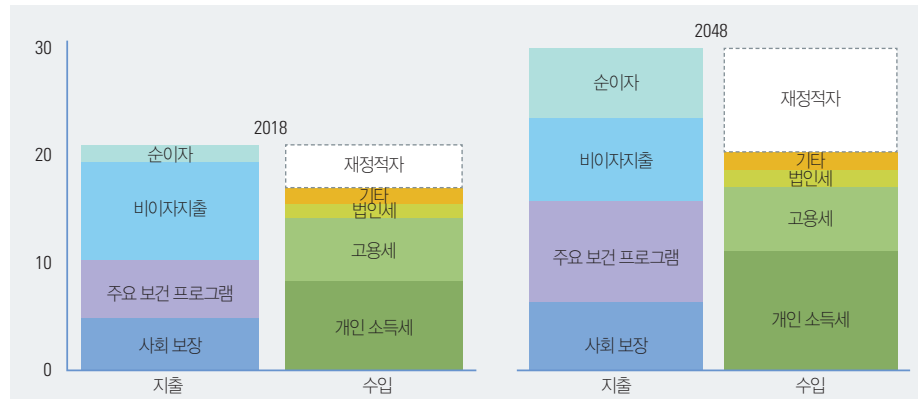
미국의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향후 30년 동안의 연방정부 수입, 지출, 재정수지, 채무전망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 6월에 발표된 「2018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현재의 법과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정적자의 증가로 연방정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1>은 2018년과 2048년의 지출·수입 전망을 비교한 것이다.

2018년 대비 2048년 GDP 대비 지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지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증가는 연방정부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된다.

<표1>은 「2018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2028년 이후 GDP 대비 채무비율은 100%에 도달하고, 2048년에는 152%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방정부 채무 규모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크며, 만일 개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을 법률로 적시한 Public

〈그림1〉 의회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2018

Law 115-97¹의 개인소득세 규정이 2025년에 만료된 이후에도 개인소득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채무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장기재정전망 주요결과

(단위: GDP 대비 %)

	평균 전망치			
	2018	2019-2028	2029-2038	2039-2048
1.총수입(Total Revenues)	16.6	17.5	18.8	19.5
-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es)	8.2	8.9	10.1	10.7
- 고용세(Payroll taxes)	5.9	5.9	6.0	6.0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es)	1.2	1.5	1.4	1.4
- 기타 (Other)	1.4	1.2	1.3	1.5
2.총지출(Total Outlays)	20.6	22.4	24.9	27.9
1)의무지출(Mandatory)	12.6	13.9	15.9	17.2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4.9	5.5	6.2	6.3
- 주요 보건 프로그램 (Major health care program)	5.2	6.0	7.4	8.7
- 기타(Other)	2.6	2.5	2.3	2.1
2)재량지출(Discretionary)	6.3	5.7	5.4	5.5
3)순이자(Net interest)	1.6	2.7	3.6	5.3
3.재정적자(Deficit)	-3.9	-4.9	-6.1	-8.4
4.채무(Debt)	78	96	118	152

자료: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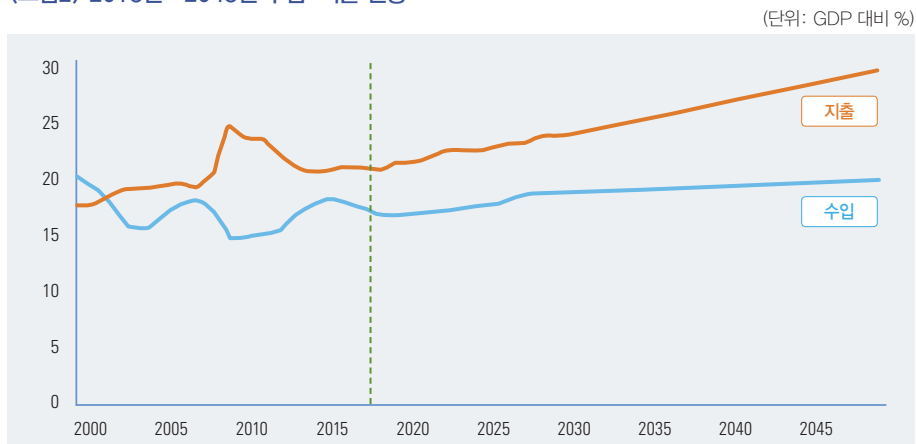
¹ 2017년 12월 법률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된 「감세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을 의미한다. 이 법은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10%~39.6%(10%,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 누진세 구조에서 10%~37%(10%, 12%, 22%, 24%, 32%, 35%, 37%)의 7단계 누진세 구조로 평균세율을 감소시키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감세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의 개인소득세 규정 대부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일몰규정이지만, 법인세 규정은 일몰규정이 아닌 새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되는 영구규정이다.



재정적자의 증가원인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18년 GDP 대비 3.9%에서 2048년 9.5%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연방정부 지출은 증가하지만 수입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2>의 2018년부터 2048년까지의 수입과 지출전망 그래프를 보면, 지출과 수입의 차이가 일정기간 유지된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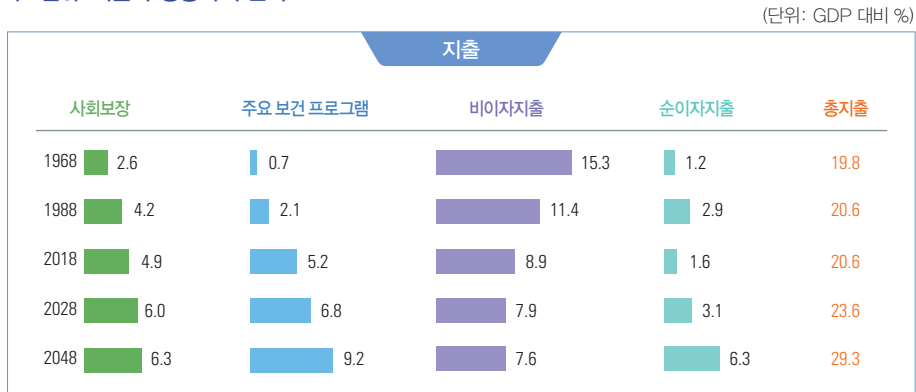
<그림2> 2018년~2048년 수입·지출 전망



자료: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2018

의회예산처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 보건 프로그램, 순이자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3> 참고). 반면 사회보장과 주요 보건 프로그램,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

<그림3> 지출 구성항목의 변화



자료: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2018

도와 주요 보건 프로그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사회보장과 보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당 보건 지출의 증가로 메디케어(Medicare)²와 주요 보건 프로그램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방정부 채무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순이자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각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1935년에 시작된 연방정부 지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그램이다. 노령·유족연금(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과 장애연금(Disability Insurance: DI) 수혜자는 6,200만 명에 달한다. 사회보장제도 지출은 2018년 GDP 대비 4.9%에서 2048년 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노령·유족연금 기금은 2032년에 소진되며, 장애연금은 202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요 보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으로 구성된다. GDP 대비 주요 보건 프로그램의 비중은 2018년 5.2%에서 2048년 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고령화와 1인당 보건 지출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 16%에서 2048년 22%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 프로그램 수혜자는 더욱더 증가하며, 지출 또한 증가할 것이다.

반면 사회보장, 주요 보건 프로그램, 이자지출을 제외한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근로자연금과 소득 보장 프로그램(income security programs) 등의 의무지출은 GDP 대비 감소한다. 사회보장제도와 주요 보건 프로그램을 제외한 의무지출 비중은 2028년 2.4%로 감소하고 2048년까지 2.1%로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GDP 대비 재량지출은 향후 10년 동안 감소하다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았다. 지난 50년 동안 GDP 대비 재량지출은 1968년 13.1%에서 2017년 6.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의회예산처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2028년까지 5.4%로 감소한 이후 일정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수입은 지출과는 다른 재정전망을 보인다. GDP 대비 연방정부 수입은 향후 몇 년간 16.6% 내외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다가 2025년까지 17.5%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2026년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감세 및 고용법」(Public Law 115-97)의 개인소득세율을 낮추는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2026년에 연방정부 수입 비중이 18.1%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8년 이후에는 GDP 대비 연방정부 수입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여전히 지출 증가속도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그림2〉 참고). 2048년 연방정부 수입 비중은 GDP 대비 19.8%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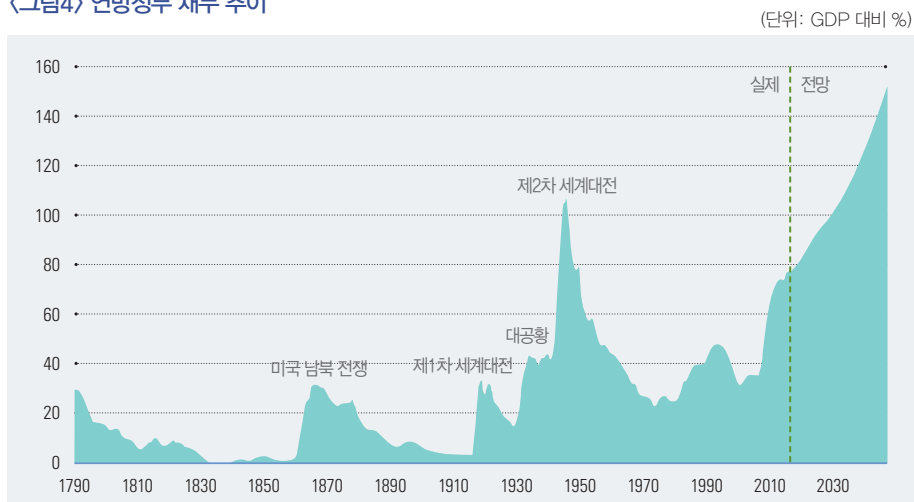
2.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이다.



연방정부 채무 증가와 그 영향

의회예산처는 현재의 법률과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방정부 재정적자와 채무 규모는 향후 30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4>의 연방정부 채무 추이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현재의 연방정부 채무 비율이 가장 높다. 2007년까지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비율은 35%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금융위기로 70%까지 채무비율이 증가하였다.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적자를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2048년까지 연방정부 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8년에는 15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4> 연방정부 채무 추이



자료: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2018

급격한 정부 채무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저축과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이자지출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가계와 기업에게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정부채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의심될 때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율로 보상받지 못하면 정부의 채권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수준에 대비한 연방정부 채무의 증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급격한 채무의 증가는 자연재해, 해외 금융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입은 감소하였으며, 소득보장제도 등 의무지출은 증가하였다. 즉, 금융위기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만일 정부가 높은 수준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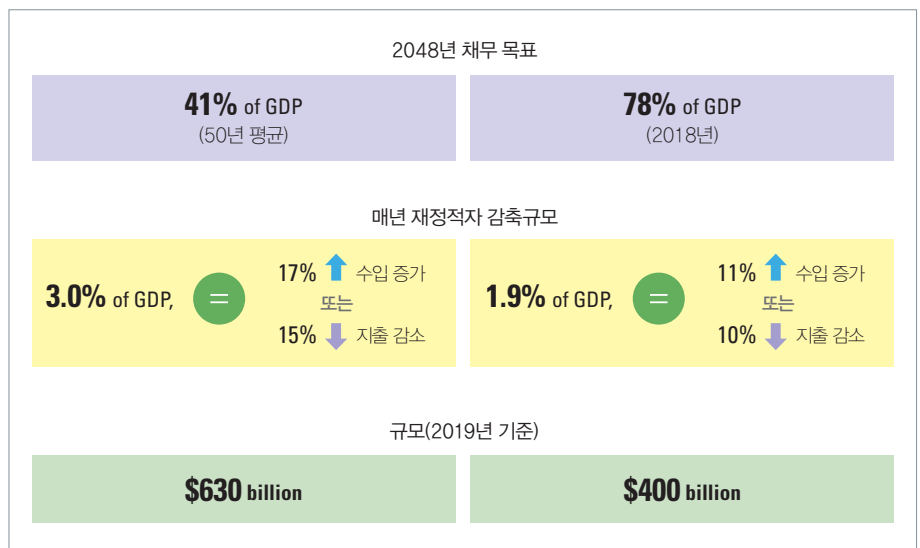


급격한 정부 채무의 증가는 재정위기(fiscal crisis)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채무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급격한 채무의 증가는 재정위기의 확률을 높인다.

채무목표 달성을 위한 수입·지출의 변화

연방정부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그 목표를 2018년 채무수준인 GDP 대비 78%로 설정한다면, 2019년부터 매년 GDP 대비 1.9%의 수준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1.9%의 규모는 약 4,000억 달러이며, 미국 국민 1인당 1,200달러를 의미한다. 또한 연방정부 채무 목표를 50년간 평균 채무수준인 GDP 대비 41%로 설정한다면, 2019년부터 매년 GDP 대비 3.0%의 규모로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3.0%의 규모는 약 6,300억 달러이며, 미국 국민 1인당 1,900달러를 의미한다. 채무 목표 달성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세대 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즉, 단기간에 채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 중 누가 더 희생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채무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 세대 및 퇴직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반면 채무 감소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은 미래의 정부 지출 감소와 세입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채무 감소에 유예기간을 둘수록 더 많은 채무가 쌓이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출과 수입의 조정규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림5〉 2048년 채무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변화(예시)



자료: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2018

참고 의회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 방법

의회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18년 봄에 의회예산처가 발표한 10년 기준선 예산(10-year baseline budget) 및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추계된다. 장기재정전망은 10년 기준선 예산 및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이를 20년 연장하여 총 30년 동안의 연방정부의 수입, 지출, 재정적자, 채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확장된 기준선 전망(extended baseline projections)이라고 한다.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은 미래를 예견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가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향후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변화시킬 경우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표2〉전망의 주요전제

	1988-2017	2018-2028	2029-2038	2039-2048	전체 2018-2048
인구 관련 변수					
인구증가율(%)	0.9	0.7	0.5	0.4	0.6
합계출산율(명)	2.0	1.9	1.9	1.9	1.9
이민율(명)	3.7	3.1	3.2	3.2	3.2
출생아 기대수명(세)	79.1	80.5	81.7	82.8	82.8
경제 관련 변수					
GDP 성장률(%)					
- 실질 GDP	2.5	1.9	1.9	1.9	1.9
- 명목 GDP	4.7	4.1	4.0	4.0	4.0
고용참여율(%)	65.6	62.1	60.3	59.6	60.7
실업률(%)	5.9	4.4	4.8	4.7	4.6
생산성 증가율(%)					
- 총요소생산성	1.2	1.1	1.2	1.2	1.2
- 노동생산성	1.5	1.4	1.6	1.6	1.5
이자율					
- 실질 이자율					
10년 만기 국채와 사회보장채권	2.3	1.4	1.6	2.1	1.7
- 명목 이자율					
10년 만기 국채와 사회보장채권	4.9	3.8	4.0	4.5	4.1

자료: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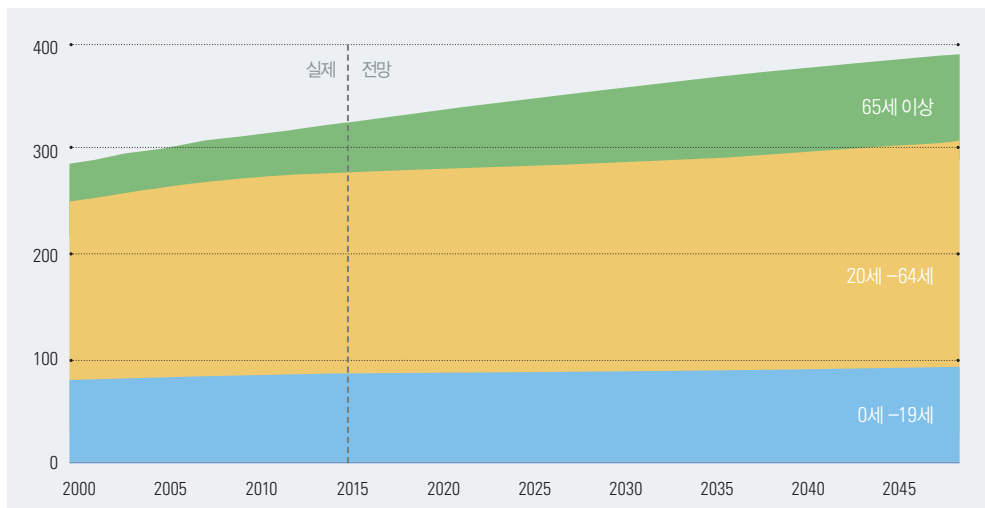
장기재정전망은 인구전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인구규모와 구조는 재정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구조는 노동생산성과 사회복지 분야의 수혜자 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표2〉의 장기인구전망을



보면, 2018년 3억 3,200만 명에서 2048년 3억 9,200만 명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0.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0년 간 평균 0.9% 증가한 것과 비교해볼 때 향후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07년 2.1명에서 향후 30년간 1.9명으로 감소하여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또한 향후 30년 동안 평균 순이민율은 미세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기대수명은 향후 30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그림6>의 연령별 인구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16%에서 2048년 22%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6> 연령별 인구 추이

(단위: 백만 명)



자료: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2018

또한 경제전망은 연방정부의 지출, 수입, 재정수지, 채무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표2>에서는 노동규모와 구성, 생산성, 이자율 등 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경제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핵심경제 변수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실질 GDP는 2018년부터 2048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1.9%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고용참여율은 고령화로 인해 2018년 62.8%에서 2028년 61.0%, 2048년 59.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업률은 2017년 말 3.3%에서 2024년 4.8%로 점차 증가하다가 2028년 이후 4.7%로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은 2018년 0.9%에서 2022년 1.2%로 증가하다가 2048년까지 이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으며, 노동생산성은 2018년부터 2048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0년 만기 국채의 명목 이자율은 2018년부터 2048년까지 평균 4.1%이며 2048년에는 4.8%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10년 만기 국채의 실질이자율은 2018년부터 2048년까지 평균 1.7%이며 2048년에는 2.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량**

콜베르(Colbert) 등장과 프랑스 재정

김동욱

kimdw@hankyung.com



France

콜베르 등장으로
조세 체제 갖춘 프랑스



프랑스 재정사(財政史)에서 조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장 밥티스트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1619~1683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가 구분된다. 콜베르 이전에는 프랑스에 사실상 제대로 갖춰진 조세 수입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콜베르가 등장한 이후에야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정 국가'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조세 체제를 갖추 수 있었다. 그의 업적은 단지 '조세 개혁(tax reform)'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절대왕정기 프랑스의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문서광이자 지독한 일 중독자였다. 1683년 64세의 나이에 신장염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할 때까지 그는 문서 속에 파묻혀 지냈다. 후대에는 이 같은 콜베르의 모습을 두고 '냉정한 계산

기계'라는 이미지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이력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시선에서는 '흑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콜베르는 한마디로 '매관매직'으로 요직에 오른 인물이다. 당시 프랑스는 주요 관직을 매매할 수 있었고, 매매를 통해 관직을 구입한 뒤에는 매년 관직가액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관직세'를 납부하면 관직의 상속도 가능했다.

오랫동안 재무지사 직책에 머물렀던 콜베르는 1664년 궁전의 설계, 건축, 조정부터 왕실축제까지 모든 궁정건설의 재정권을 쥔 조영총관(surintendant des batiment)직을 돈 주고 차지하면서 권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는 1665년 재무참사회에 재무총감직을 신설해 그 자리를 맡았다. 1669년에는 해군과 항구, 운하, 식민지 건설 등 바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해군 국무비서가 됐다. 같은 해 그는 궁정소비와 납품권을 좌지하며 각종 특권의 온상이 된 궁내부 국무비서관직마저 구입했다.

1670년부터 프랑스 전국의 수로와 다리 건설, 화폐 주조, 숲, 광산 등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총관직을 겸임했다. 1679년에는 동생에게 외무대신 자리를 줬다. 프랑스의 주요 직책 중 해군부, 외무부, 궁내부 등 경제와 관련된 주요 직책은 콜베르 가문에게 떨어졌다. 전체 해군관리의 60% 가량이 콜베르와 선이 닿은 인물이었다. 1667년에는 파리 경찰총감직을 새로 만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수족인 법복귀족 라레니를 앉혔다. 라레니는 콜베르의 눈과 귀 역할을 충실히 시행했다. 이처럼 프랑스 경제정책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리를 차지한 콜베르였지만 그에게도 쉽지 않은 미션이 있었다. 바로 빚더미에 앉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텅 빈 국고를 채워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1661년의 프랑스 정부수입 8,400만 리브르(livre) 중 5,200만 리브르가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 국고의 절반 이상이 국채 및 대부금 이자, 타운세(인두세) 징수자들의 선취금, 단기대금 상환 등으로 돌아갈 뻔이었다. 돈이 부족하니 미래의 수입에서 앞당겨 쓰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회계법원의 전년도 결산보고서 감사에 의하면 1661년에 이미 1662년과 1663년의 수입 일부가 선지출 되었다.

지역별로 쪼개진 프랑스의 경제 환경도 재정개선의 걸림돌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지역별로 경제활

동의 기준이 큰 차이가 난 탓에 전국적인 상거래가 쉽지 않았다. 랑그도크주만 하더라도 토지를 측량하는 단위가 50개나 사용되었고 구역이 달라지면 동일한 용어도 뜻이 바뀌었다. 세테레(sétérée)라는 토지 단위는 0.16헥타르(ha)에서 0.51헥타르까지 편차가 있었다. 소금세는 거주지에 따라 60리브르에서 1,10리브르까지 심하게 왔다갔다 했다. 프로방스 동부 지역은 파리와 교역을 하느니 더 멀리 떨어진 프로이센과 거래하는 편이 수월했을 것이란 평까지 나왔을 정도다. 베르사유에 있는 프랑스 중앙정권의 영향력은 시골로 갈수록 한계가 명확했다.

사실 이처럼 복잡하고, 지역마다 다른 경제 환경 탓에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거둘 수 있는 타유세가 이전 정권부터 선호된 것이기도 했다. 콜베르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비정상적인 대부이자 지출을 정지했다. 또 부당한 재정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재정거래를 차단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각종 대부와 채권의 환불과 삭감을 시도했다. 타유세 대부금이 삭감됐고, 공채증서도 액면가의 20%가 삭감됐다. 이율도 5%로 고정됐다.

이와 함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됐다. 당시 첨단 학문이었던 통계를 동원한 작업과 재정정책의 문서화 작업이 도입됐다. 방치돼 있던 왕령지 토지대장 재조사 작업도 시작됐다.

타유세 납부자들의 토지대장도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타유세 납부자를 늘리기 위해 1666년 3월 22일 전국의 귀족 참칭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했던 동산과 부동산에 적용되던 'taille de'occupation'이나 'taille d'exploitation'이라고 불리던 조세 특권을 이용해 국가의 세금납부 의무에서 빠져나갔는데 이를 '정조준'한 것이었다. 콜베르 본인 역시 출신에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기에 급증한 가짜 귀족을 색출해서 면세특권을 박탈하는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조치는 1674년까지 계속됐다.

콜베르 정책의 압권은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간접세에 주목한 최초의 정책 입안가이기도 했다. 특히 타유세를 싫어했다. 당시 징세구조의 근간이었던 타유세는 '소득세'였다. 하지만 납세자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두가 자신의 실제 수입을 숨겼으며,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힘없는 이웃에게 전가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성직자와 귀족인 1신분과 2신분, 그리고 다양한 도시들이 면세특권을 누리며 징세구조 왜곡이 심해졌다. 자연히 가난한 농민층의 세 부담은 컸다.

우선적으로 콜베르는 타유세를 손보기 시작했다. 타유세를 줄이는 것은 그의 조세개혁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리고 타유세 비중을 줄임으로서 징세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부정행위도 없애 나갈 수 있었다. 과거 귀족이 소유한 토지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못했지만, 이제 원천적으로 귀족령이 아닌 토지는 소유자가 귀족이든, 평민이든 관계없이 세금을 내는 식으로 개혁을 이뤄나갔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각종 세법도 통일해 나갔다.

그 결과, 1657년 5,240만 리브르였던 타유세는 1661년 4,500만 리브르로, 1665년에 4,200만 리브르로 줄었다. 이후 1679년까지 타유세 규모는 3,800만 리브르에서 4,100만 리브르 사이를 오갔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간 전쟁이 끝나 돈 쓸 일이 줄어든 1680년 이후에는 3,500만 리브르 선까지 떨어졌고, 3,200만 리브르로 타유세 징수가 축소된 해도 있었다.

이처럼 타유세를 줄인 콜베르는 대신 염세와 포도주세 등 간접세를 올렸다. 직접세에서 면세특

권을 누리던 1신분과 2신분도 간접세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콜베르는 “국가재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인력구조도 방만해져선 안 된다”는 말로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켜 나갔다. 이는 과거 타유세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간접세라는 것이 말은 쉬워 보이지만 어떤 물품에 어느 정도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간접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시행했다. 우선 간접세 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시장정비’를 병행했다. 소금에 대한 세금인 엄세(gabelle)를 제대로 걷기 위해 1661년부터 소금 밀매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소금 판매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국가의 독점사업이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 침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이외의 목적으로 소금을 대량 거래하는 것도 처벌을 받았다. 결국 이 해에만 2,300명의 부녀자와 6,600명의 어린이가 소금밀매로 체포됐다. ‘보르도 지역 감옥이 소금 밀매자들로 가득 찼다’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와 함께 가축과 생선, 종이, 금속 등의 거래도 투명하게 만들어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품목별로 세율에 차등을 뒀다. 가령 생활필수품인 소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 반면, 포도주세의 경우엔 높은 세율이 부과됐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포도주가 꼭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콜베르의 일성이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1663년 4,160만 리브르이던 간접세 수입은 1665년 4,460만 리브르로 늘었다. 이후 간접세 수입은 프랑스 재정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작업도 도박도박 진행됐다. 이를 위해 과도하게 커진 관료조직을 손보기도 했다. 돈만 소모하던 불필요한 관직을 줄여나갔다. 징세조직도 단순화, 일원화해 나갔다. 국가가 진 빚도 줄여나가 1660년 2,000만 리브르에 달했던 채무도 1670년 700만 리브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콜베르의 이 같은 노력 덕에 루이14세는 1661년 친정 이후 10년간 재정 순수입이 두 배로 늘었다. 콜베르는 면세특권을 누리던 가짜 귀족부터 잡았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공평과세’ 개념으로 간접세를 적극 도입했다. 생필품과 비생필품 간에 세율을 차등화한 것도 콜베르였다. 조세 수입과 관련한 제도 및 법률을 정비했고, 지출 측면에서도 구조적으로 발생하던 ‘쓸모없는’ 지출을 줄였다. 서구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재정정책은 콜베르의 등장 이후야 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C(콜베르 이전)’과 ‘AC(콜베르 이후)’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내량

참고 문헌

- 이영림. (2009). 「루이14세는 없다」. 푸른역사.
- 로저 오스본. (2012).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의 역사」. 최완규 옮김. 시공사.
- Mancur Olson.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Economic growth, stagnation and social rigidities」. Yale University Press.
- Arthur John Sargent. (2004). 「The Economic Policy of Colbert」. Batoche Books.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 P F I S N E W S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제협력 활동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년 9월 19일(수)~20일(목) 양일간 카자흐스탄 재무부와 재정정보시스템 관련 KSP사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주최한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재무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회의에는 재무부 차관 Yensebayev Ruslan과 관련 부서장 등 총 11인이 참석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의 재정개혁, dBrain 구축경험, KSP 컨설팅사업 관련 협의 및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e나라도움 인터넷 카페 서포터즈 모집·운영 예정

한국재정정보원은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자 간 지식 공유 및 소통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신통방통 e나라도움(<https://cafe.naver.com/enaratong>)'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e나라도움 운영단은 카페 가입자 중 e나라도움 시스템을 6개월 이상 사용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정을 거쳐 10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시스템 사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페 내 사용자 문의에 대해 직접 답변·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문적 지식을 전파할 계획이다. **내력**

월간

나라 재정

OCTOBER
2018 Vol. 22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병욱(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OCTOBER
2018 Vol. 22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tis.or.kr



9 772508 897000 10
ISSN 2508-8971